

2026
07

since 1990 | vol. 428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나라경제

Special

반도체산업,
위기에서
슈퍼사이클로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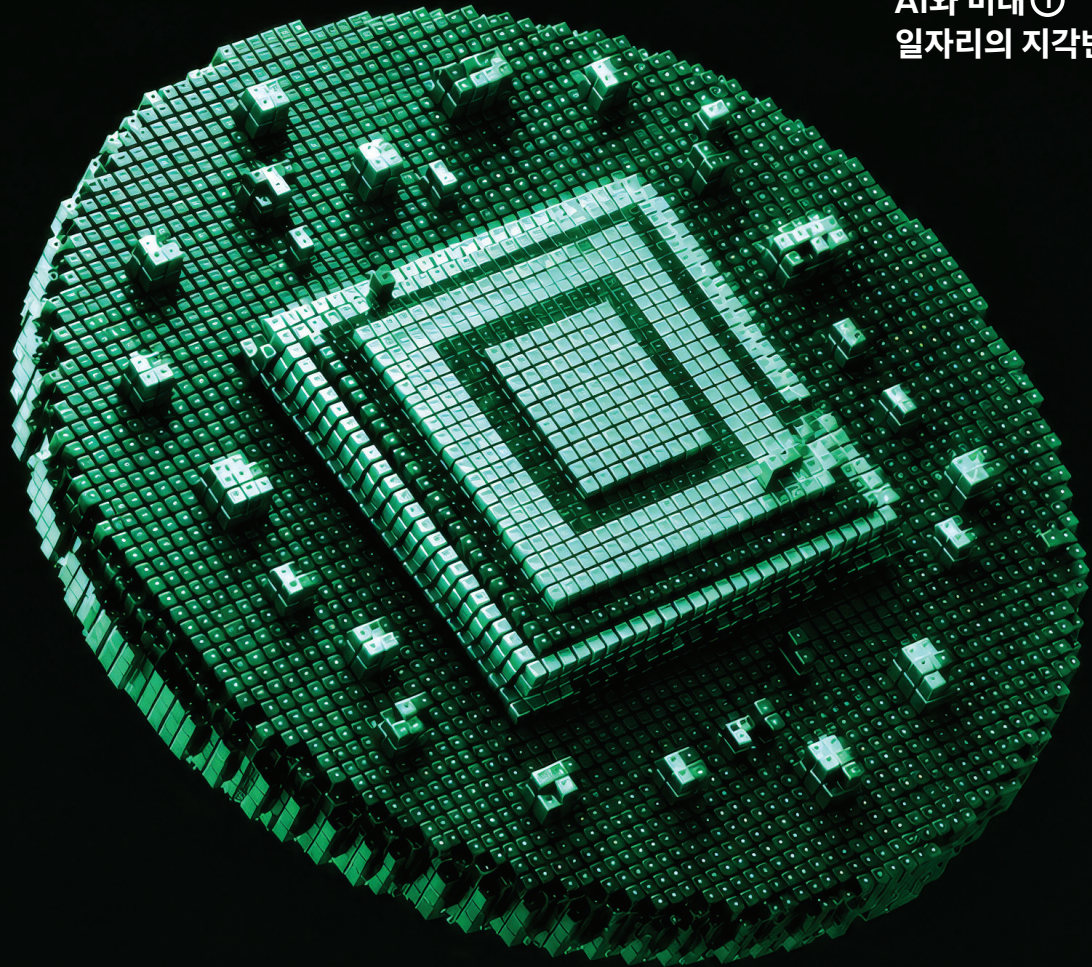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Issue

극과 극, 심화하는
청년 자산 양극화

Now

시와 미래 ①
일자리의 지각변동



반도체산업, 위기에서 슈퍼사이클로

1 도입 — 메모리반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오는 반도체로 D램과 낸드플래시가 대표적이다. AI 확산으로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AI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다.

2 정책 — 반도체 특별법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법률.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조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3 초과세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은 3월 추경 편성 당시 기존 전망보다 25조2천억 원 더 많은 415조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실제 세수는 이를 다시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다.

4 노사협의

최근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협의에 이목이 쏠렸다.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 성과급과 자사주 지급에 합의했으나 사내하청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 패권경쟁 — AI 반도체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반도체를 말한다. GPU를 비롯해 HBM, AI 맞춤형 반도체(ASIC) 등 다양한 기술이 함께 발전하며 AI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대만·중국·일본이 설계와 제조,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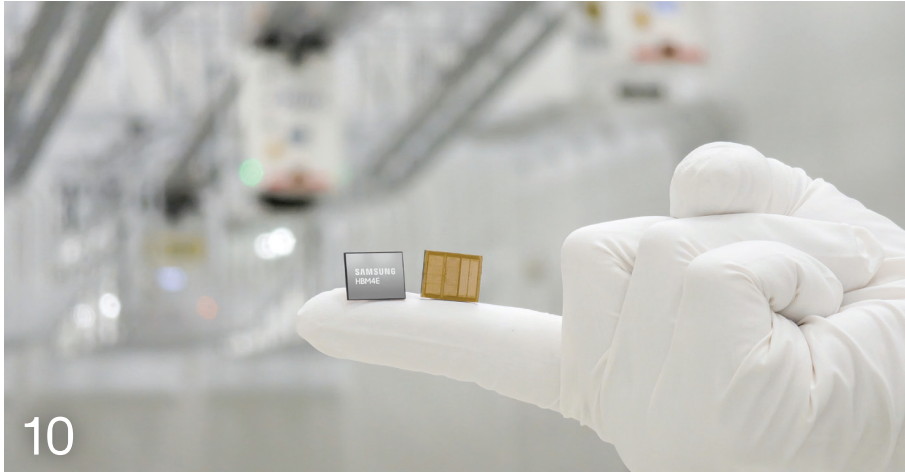
6 인터뷰 —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로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로봇 등 기기 내부에서 직접 AI를 구동하는 기술이다. 빠른 응답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 높은 보안성을 갖춰 AI서비스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제품별 용도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온칩(SoC) 설계가 필수다.







10



24



50

S Special

반도체산업, 위기에서 슈퍼사이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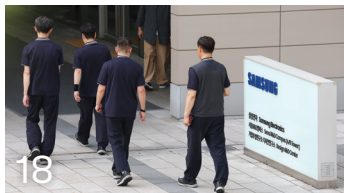
도입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10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포그래픽
현시점 반도체에 대한 거의 모든 것 12
『나라경제』 편집실

정책
전국에 팽 깔고 1조 원 R&D로 국산 첨단 NPU 10개 개발 14
안홍상 산업통상부 반도체과장

초과세수
초과세수, 지금의 선택은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까 16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성공급 분배
삼성전자가 쏟아울린 초과이익 공유라는 숙제 18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패권경쟁
반도체 각 분야의 전통적인 강국, 강자 바뀔 수 있다 20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인터뷰
“지금의 호황으로 얻은 자본과 협상력을 AI 모델, 에이전트 생태계로 옮겨가야” 22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I Issue

극과 극, 심화하는 청년 자산 양극화

도입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30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인포그래픽
20대 평균 순자산 격차, 모든 세대 중 압도적 1위 32
『나라경제』 편집실

정책
저축 장려 넘어 스스로 자산 굴리는 힘 키워주는 정책으로 33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특별좌담
뭐라도 해보려다 부채 떠안은 청년 늘어...청년연금 등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할 사전적 지원 필요 34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I Interview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인터뷰
“메모리반도체 이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총력 다할 것” 24
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N Now
SI와 미래 ①
일자리의 지각변동

현황
SI가 가장 먼저 빼앗을 일자리는 무엇일까? 44
오현우 중앙일보 IT산업부 기자

역량
탈숙련을 경계하라 46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

노동법
SI 시대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향 48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제언
SI는 결코 문명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 50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경제정책해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국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는다 54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절반으로 줄일 것 56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10개 창업도시 전국에 만든다 58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장

기업집단 공시, 투명성 강화하고 정보 질 높인다 60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 (전 공시점검과장)

세계는 지금

OECD 개방시장과 공정경쟁 원칙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정책 62
이용진 주OECD대표부 참사관



WTO 다자무역의 '안전벨트'였던 GATT 제28조, '깨진 유리창' 될까? 65
허정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칼럼

K인사이드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38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박진영 엔닷라이트 대표 40
“피지컬 AI 학습시키는 3D 데이터 시장의 주도권 쥔 겁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살모없음의 살모 창작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 42
김중혁 소설가

오늘도 똑똑한 금융생활 스페이스X가 증시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52
이현 중앙일보 기자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인도의 '계산된' 개방...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에서 지속 성과 거두려면? 68
한중원 KOTRA 인도 뉴델리무역관 과장

국제개발협력 이슈톡 6G 분야 표준화 주도하는 한·영 KSP, 글로벌 현안 대응하는 지식협력 플랫폼으로 확장 70
송지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강양구의 과학 토크 우리가 마신 것은 생수였을까, 플라스틱이었을까 72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AI 트렌드 따라잡기 구글은 왜 스스로 검색을 버렸을까 74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밥 한 그릇의 위로 길티 플래저, 그 역설적 쾌감 76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로드리고의 여행 한 페이지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등을 따라 여행하는 일 78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시평 '3고' 시대 금융의 본령을 다시 묻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82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

- 발행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발행인
김세직 KDI 원장
- 편집인
김후진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실장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의택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옥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서영민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김수경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연경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부 주원석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오상윤 기획조정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최영범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소성환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박영호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진수웅 기획총괄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정섭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양병권 정책홍보팀장
- 편집간사
김선정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연구원

- 편집장
양은주
- 취재·편집기자
오성록, 이강선, 황현성, 정서현
- 감수
이재열
- 발행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ISSN
1227-8033 07
-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e-mail
nara@kdi.re.kr
- 발행일
2026년 6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37권 7호(통권 428호)
-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 기사문의
044-550-4646
- 디자인·인쇄
텍스토
- 사진
아유림 스튜디오
- 표지 디자인
남연수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나라경제팀

· 6월호 당첨자
강건우(인천 남동구)
강창규(전북 전주시)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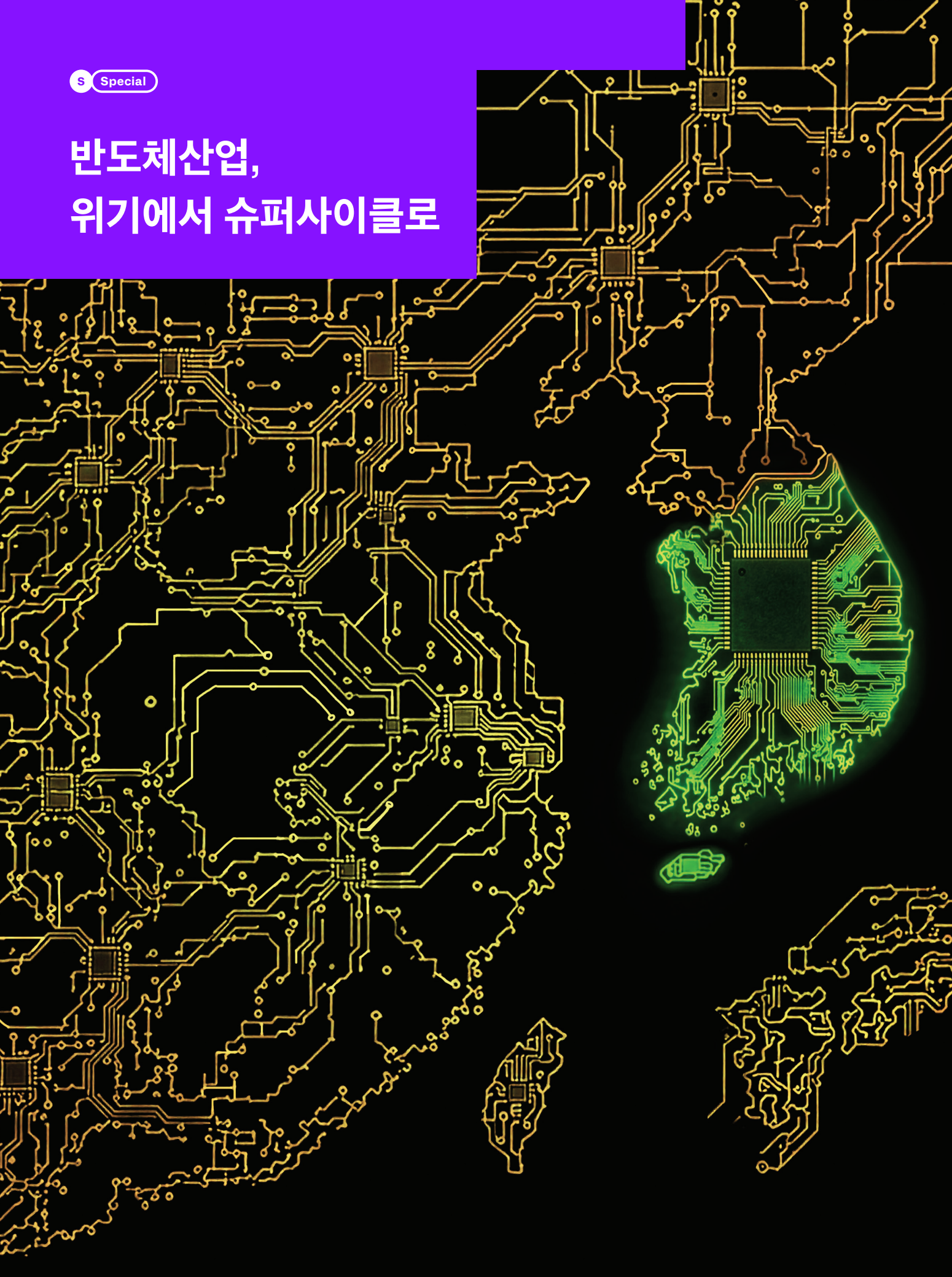
www.facebook.com/kdinara1990


[nara_kdi](https://www.instagram.com/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S Special

반도체산업, 위기에서 슈퍼사이클로





지난 6월 18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메모리반도체 대표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나라경제』 2023년 5월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을 점검했던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이제 우리 반도체산업은 AI 경쟁의 바람을 타고 찾아온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맞게 됐다.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패권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우리 반도체산업이 미래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우위를 지켜내고 균형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짚어본다.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swlee6591@eu.genefn.com

오랫동안 반도체산업에 하나의 상식으로 굳은 것이 있다. 메모리는 늘 사이클 산업의 대명사로 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CPU와 GPU의 연산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데이터를 잠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상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위를 보면 그 변화가 선명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람코와 엔비디아가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3~6위는 알파벳,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차지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아마존, 메타, TSMC, 마이크론이 7~11위를 기록했다. 3개나 되는 메모리 기업들이 빅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 11위 안에 포함된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모리 기업이 세계 최고 영업이익의 기업군 상단에 오르는 모습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반도체산업의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비중이 과거 평균의 2배 수준인 40%대 후반에서 50%에 달할 전망이다. 다음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것은 경기변동에 의한 사이클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가. 지금의 메모리 초호황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AI 열풍이 식으면 메모리시장은 다시 과거처럼 변동성이 큰 다운 턴(down turn)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메모리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AI 시대에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부터 그 역할 변화 과정들을 추적해 보려 한다.

CPU 대비 너무 느리고 원가 절감이 기술의 핵심이던 메모리, 딥러닝 기반 HBM 수요 급증에도 조연에 머물러 와

전통적인 컴퓨터는 하나의 박스였다. 그 안에는 CPU가 있었고, CPU 주변에는 메모리와 저장장치가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지역성이라고 불렀다.

과거 CPU 중심의 컴퓨팅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메모리에 자주 접근하지 않는 것이었다. CPU는 매우 빠른 반면 메모리는 너무 느렸기 때문이다. 이를 전통적으로 메모리월(Memory Wall)이라 한다. 그래서 CPU 주변에는 캐시라는 작고 빠른 기억장치가 배치됐다. 자주 쓰는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또한 이 시절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비용 변수였다. PC나 서버 가격에서 메모리에 배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메모리의 스펙은 그 예산 내에서 결정되는 식이었다. 메모리 기업의 기술 경쟁도 같은 방향을 향했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내는 것, 즉 미세화와 원가 절감이 기술의 핵심이었다. 더 싸게, 더 많이, 더 작게 만드는 것이 메모리산업의 오랜 문법이었다.

인터넷은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했고, 스마트폰은 인간과 컴퓨터를 24시간 동기화했다. 데이터는 개인의 PC에서 서버로, 다시 클라우드로 이동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를 꾸준히 키웠다. 데이터센터는 더 많은 서버와 저장장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메모리는 여전히 줄여야 할 비용이었다. 시스템 설계자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D램 접근을 최소화하며, 저장 비용을 낮추는 것이었다. 즉 클라우드는 메모리 수요를 키웠지만 메모리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했다.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GPU가 컴퓨팅이라는 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GPU는 수많은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데 탁월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도 이 시기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컴퓨팅 성능을 설명하는 언어는 여전히 플롭스(FLOPS), 즉 초당 몇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는지였다. 주인공은 여전히 GPU였고, HBM은 조연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거대언어모델(LLM)의 등장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대규모 언어모델의 품질은 상당 부분 파라미터(Parameter) 수와 직결되는데, 본질적으로 파라미터는 메모리였기 때문이다. 모델이 커진다는 것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다는 뜻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메모리 공간과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한다.

더 긴 컨텍스트도 마찬가지다. 시가 이전 대화, 문서, 코드,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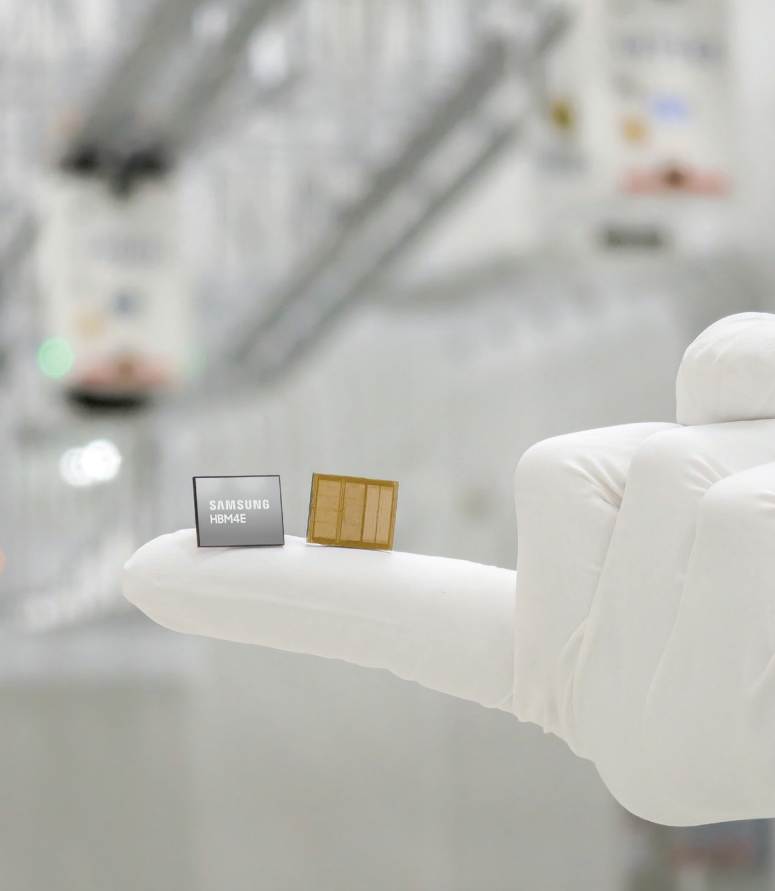
사이클 산업

메모리월(Memory Wall)

고대역폭메모리(HBM)

거대언어모델(LLM)

파라미터



지난 5월 29일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제품 샘플을 공개하고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 삼성전자

지, 작업 이력 등을 기억하고 처리하려면 그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돼야 한다. 추론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메모리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LLM, 에이전트 AI 등장으로 바뀌고 있는 메모리의 의미: 보조 부품에서 핵심 아키텍처로, 지능 인프라의 기본 단위로

이 지점에서 메모리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모델의 지식과 문맥을 유지하는 공간이자 지능의 활동 무대가 된 것이다. 드디어 메모리가 비용에서 성능으로, 보조 부품에서 핵심 아키텍처로 격상됐다.

에이전트 AI는 이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기존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동 시스템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고, 여러 도구를 호출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이제 지능은 더 이상 하나의 모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여러

모델, 여러 도구, 여러 작업 흐름 사이에 분산돼 존재한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구를 해석하고, 다른 에이전트가 검색을 수행하며, 또 다른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결과를 검증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태와 컨텍스트는 계속 저장, 참조, 복제된다.

따라서 KV 캐시(Key-Value Cache)는 기존 CPU의 로컬 캐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캐시는 메모리 접근을 줄이기 위한 한정된 임시 공간이었지만, LLM의 KV 캐시는 모델이 지금까지 읽고 이해한 문맥을 보존하는 플랫폼 자체이며 에이전트가 많아지고 문맥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커진다.

인간의 지능도 단순한 계산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면 경험은 축적되지 않고, 문맥이 없다면 의미는 생기지 않는다. 시도 마찬가지로. 더 강한 AI는 더 빠른 연산뿐 아니라 더 많은 기억, 더 빠른 기억, 더 오래 지속되는 기억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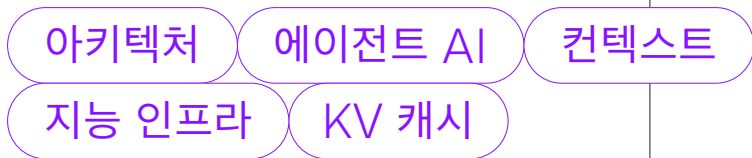
과거 운영체제는 CPU와 메모리, 저장장치를 관리했다. 그러나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가 된다. 수많은 GPU와 HBM, D램과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전력을 하나의 지능 기계처럼 조율해야 한다. 이제 컴퓨팅은 메모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고, 메모리는 아키텍처 자체가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컴퓨팅의 중심은 연산이었다. 그러나 AI가 이 질서를 바꾸고 있다. 특히 LLM의 등장은 메모리의 역할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메모리의 크기와 속도는 곧 지능의 크기와 속도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비용 변수였던 메모리가 이제 컴퓨팅의 성능 변수가 됐다.

그래서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메모리산업은 앞으로도 사이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가 늘면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메모리산업의 숙명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에는 과거 사이클과 다른 구조적 요소가 있다. 더 많은 메모리는 더 큰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더 긴 문맥을 가능하게 하며, 더 복잡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더 높은 지능은 더 큰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이 직선으로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과잉투자 조정, 가격 급등과 하락, 기술 병목과 공급 확대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메모리는 AI가 지식을 저장하고, 문맥을 유지하며, 추론을 이어가는 지능 인프라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메모리가 컴퓨팅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㉞



현시점 반도체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반도체 종류

종류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기능	데이터 기억, 저장	데이터 처리, 명령 수행
예	D램, 낸드플래시 등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AI 반도체 등
특징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 설정한 표준 규격으로 설계·제작함에 따라 종합반도체기업(IDM;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 중심으로 생산	고도의 연산 처리를 위해 회로구조가 복잡해지며 IP, 설계, 디자인, 제조, 검사, 패키징 등으로 분화된 생태계가 정착

자료: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전방산업

스마트폰·가전·자동차·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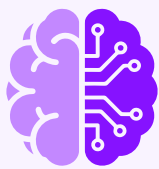
설계·가공·생산·테스트·패키징 등



후방산업

소재·부품·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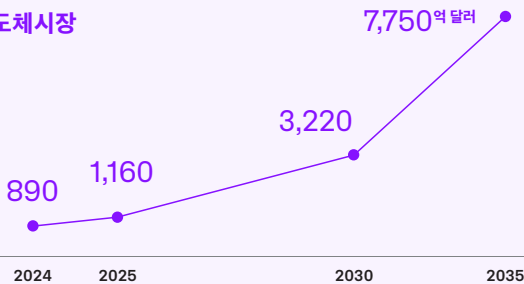
반도체 공정 과정



AI 반도체가 뭐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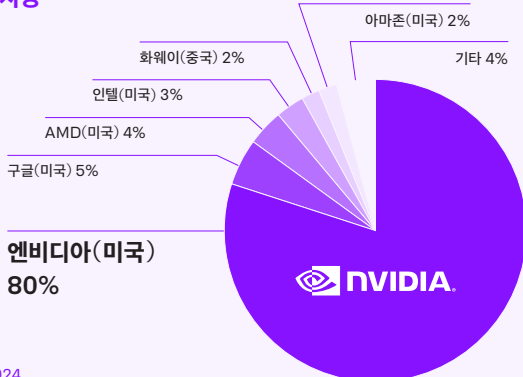
AI 반도체는 AI가 학습과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연산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텐서처리장치(T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AI 시스템온칩(SoC)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반도체시장 전망



자료: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2026

AI 반도체시장 점유율



자료: 옴디아, 2024

점점 커지는 AI 반도체 수요

데이터센터(성능 중심)

- 대규모 학습·추론
- GPU, TPU, AI 가속기
- 고성능·고전력

AI 시스템온칩(SoC)(효율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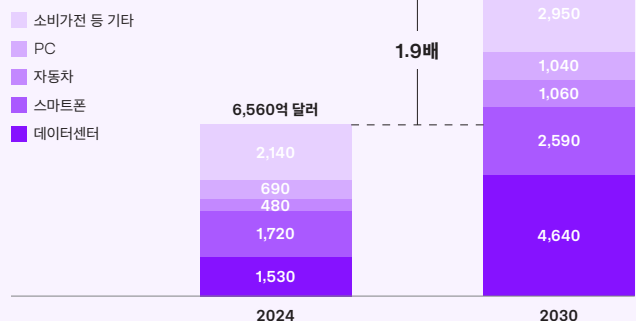
- 실시간 추론 중심
- 스마트폰, PC, 차량 등
- CPU+GPU+NPU 통합칩
- 저전력·저지연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6



글로벌 반도체시장 수요 전망



자료: 카운터포인트 리서처, 2025

반도체 기업 유형

- 반도체 IP 기업** (설계 자산)

물리적인 칩을 만들지 않고 팹리스나 종합반도체기업에 핵심기능 회로 도면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해 수익 창출
ARM(영국), 시놉시스(미국)
- 팹리스** (설계 전문)

IP 기업처럼 제조 공장(Fab) 없이 설계에 집중하지만 파운드리에 제조를 위탁해 자사 브랜드 칩을 완성, 시장에 유통·판매
엔비디아-퀄컴(미국)
- 디자인하우스** (설계와 생산의 가교)

팹리스 설계 도면을 특정 파운드리 공정 규격에 맞춰 도면으로 재가공하는 역할
GUC(대만)
- 파운드리** (위탁 제조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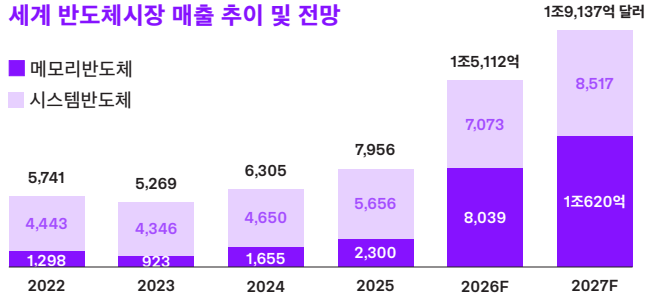
자체 브랜드를 설계하지 않고 고객사가 발주한 반도체를 수탁 생산
TSMC(대만)
- OSAT** (패키징 및 테스트) 역할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ASE(대만), 엠코(미국)
- 종합반도체기업 (IDM)**

최초 기획과 설계부터 웨이퍼 제조,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한 기업에서 수행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 인텔-마이크론(미국)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MI, IDC, OECD, 트랜스포스 등 종합

세계 반도체시장 매출 추이 및 전망



주: 2026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2026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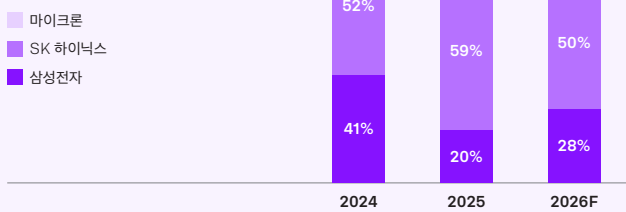
자료: 지표누리, 한국무역협회 종합



그런데 왜 메모리반도체가 뜨는 걸까?

AI 기술의 급성장으로 빠른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요구됐지만 메모리가 프로세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칩을 쌓아 초고속 대량 전송을 가능하게 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직접 탑재해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메모리(PIM; Processing in Memory)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HBM 공급업체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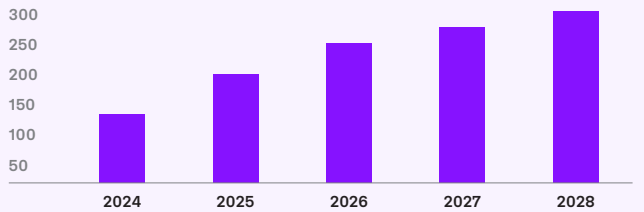
주: 2026년은 전망치 자료: 트랜스포스, 2026

HBM 개발단계 및 시장 규모 전망

HBM 개발단계

구분	출시연도	종류	성능
1세대	2015	HBM	2Gb/1.0Gbps
2세대	2018	HBM2	8Gb/2.4Gbps
3세대	2020	HBM2E	16Gb/3.2Gbps
4세대	2022	HBM3	16Gb/5.6Gbps
5세대	2024	HBM3E	24Gb/8.0Gbps
6세대	2025	HBM4	24Gb/11.7Gbps
7세대	2026	HBM4E	32Gb/14.0Gbps

글로벌 HBM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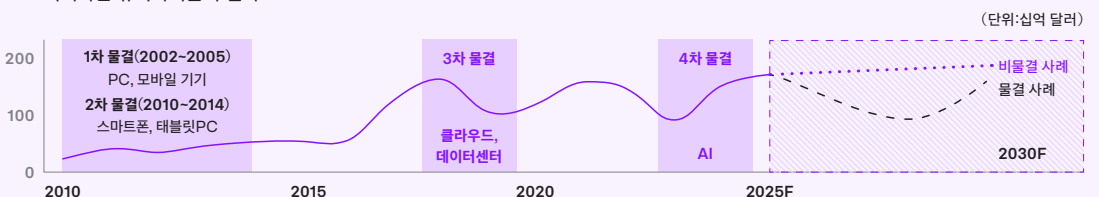
자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일PwC, 가트너 등 종합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수 있을까?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호황 뒤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하락세가 뒤따르는 '사이클 산업'의 전형으로 볼려왔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촉발한 이번 수요 폭발도 과거의 사례처럼 일시적인 사이클에 그치게 될까요, 아니면 이전에는 없었던 지속적인 호황기를 이어가는 슈퍼사이클이 될까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

자료: 삼일PwC, 2026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전국에 팹 깔고 1조 원 R&D로 국산 첨단 NPU 10개 개발



안홍상
산업통상부 반도체과장
gariya@korea.kr

최근 AI 패권경쟁이 심화되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AI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마냥 낙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반도체산업은 기술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기업이나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승자독식’ 산업이다. 미국의 마이크론, 중국의 CXMT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AI 확산이 우리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기회이자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구체화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낙오되면 단순한 메모리 하청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AI 확산을 우리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해 압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AI 패권경쟁, 우리 반도체산업에는 기회이자 위기...

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기간 단축, 호남권 등으로 성장 거점 확산

반도체산업 정책은 크게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를 통한 초격차 달성, 반도체 생산 거점의 다각화, 미래 반도체 신시장 선점, 반도체 혁신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메모리 생산 속도와 규모를 뛰어넘는 생산능력을 조기에 갖춰 AI 대전환으로 발생하는 메모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경쟁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택·용인 등 수도권에 계획된 메모리 팹(Fab) 건설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할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 반도체 팹이 밀집될 경우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부지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이나 일본 등은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에 분산해 건설하는 추세다. 특히 대만의 경우 정부가 과학단지를 조성해 산학연 집적을 유도하고 수도 타이베이에 위치한 북부의 신주와 학단지에서 시작해 중부·남부 지역으로 이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허가·토지·세제·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수도권을 비롯해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해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메모리 팹 투자를 통해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등을 단축하는 한편 전력·용수 등도 건설 계획에 발맞춰 지원하고자 한다. 동남·대경권은 부산과 구미 등 기존 반도체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 거

지난 1월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공사현장. © 연합뉴스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 생산 거점 다각화
메모리 팹 서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점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을 위한 첨단 팹을 건설해 패키징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시장 선점 위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개발하고 국내 소부장 제품 평가-양산 연계하는 트리니티 팹 내년 준공

메모리반도체 생산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메모리에 편중된 구조로 세계 반도체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져 왔다. 2010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시스템반도체 지원정책이 마련됐으나 실제 산업 수요와의 괴리, 제한적 지원 등으로 성과 도출이 미흡했다. 이에 우리 반도체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아직은 강자가 없으나 AI 확산을 뒷받침할 미래 반도체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피지컬 AI를 구현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자율주행차, 가전·IoT, 로봇,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국산 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10개를 개발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R&D 과제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NPU 탑재 제품의 양산을 위해 실제 수요기업과 연계해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높은 내구성 및 전력 효율성을 보유한 화합물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등 전력반도체 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개발·양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9일 제

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종합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튼튼한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소부장을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간다. 차세대 메모리용 장비를 상용화하는 R&D에 나서는 한편, 국내 소부장 제품 성능을 평가하고 양산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트리니티 팹을 내년 하반기 준공해 한국형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반도체 종합 연구기관으로 기업·대학·정부가 함께 차세대 반도체 공정·소자·패키징 기술을 선행 개발·검증하는 개방형 연구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2030년까지 1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협력한다. 올해 하반기 GIST 내 'ARM 스쿨'을 개교해 팹리스 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12인치 40~130나노급 파운드리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해 자동차·가전·전력망 등 반도체의 국내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가 국가 반도체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회계'가 약 2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아울러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해 앞서 언급한 생산능력 확충 및 산업육성 정책을 국가적으로 총력 지원한다.

반도체산업의 역대급 호황에 힘입어 6월 중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각각 2천조 원을 상회하고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이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이나 패러다임 전환으로 언제든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은 '축제'가 아닌 '다음 10년을 준비할 시간'으로 인식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에 주어진 역대급 기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초격차, 거점 다각화, 신시장 선점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㉞



동남·대경권 소부장 혁신 거점 한국형 IMEC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초과세수, 지금의 선택은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jhoh@kipf.re.kr

반도체산업이 AI 수요에 힘입어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 호조로 올해 1~5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019억 달러에 달해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 기록(952억 달러)을 다섯 달 만에 넘어섰다. 지난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깜짝 성장했고, 올해 들어 코스피 누적 거래대금은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기록(3,825조 원)을 반년도 안 된 6월 중순에 이미 넘어서는 등 호황의 온기가 거시지표와 자산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 가파른 반도체 호황으로 재추계치마저 웃돌아...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 세수일까, 구조적 증가일까?

호황은 세수(稅收)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세수입을 390조2천억 원으로 잡았으나, 반도체산업 호황과 자산시장 활황으로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25조2천억 원 많은 415조4천억 원으로 상향 재추계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올해 실제 세수는 이 재추계치마저 다시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호황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세수 풍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넘어 벌어지는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더 걷히는 초과세수는 일차적으로 세수 추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수개월 전에 추계되는 데다 세수 기반이 반도체 업황과 자산시장에 크게 좌우돼 그 변동이 고스란히 추계 오차로 이어진다. 실제로 법인세수는



지난 6월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20년 55조5천억 원에서 2022년 103조6천억 원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62조5천억 원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84조6천억 원으로 다시 늘었고, 국세수입 총액 변동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변동성이 상존하는 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국세수입의 변동성이 큰 만큼 올해와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볼지가 초과세수 활용 논의의 전제가 된다. 최근의 세수 호황을 두고 경기 순환에서 비롯된 일시적 세수 증가로 보는 시각과, 시라는 구조적 수요 증가로 세수 기반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늘어난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답도 달라진다.

초과세수 활용 논의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현행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 중에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법정 사유가 있어

반도체 호황 국세수입 상황 추가경정예산
「국가재정법」 세계잉여금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번 초과세수 활용 방향이 향후 재정운용 방향 가를 수도…
투자, 분배, 재정여력 확충 택일 아닌 세 기조 사이 배분의 문제**

이처럼 초과세수 활용은 현행 제도가 정해놓은 경로와 입법의 제약 안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커진다. 이번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을 정하는 일은 일회성 처분을 넘어 재정운용의 방향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전개된다.

첫째는 투자론이다. 반도체 경쟁력이 만들어낸 세수를 차세대 기술과 미래산업, 인력 등에 투자해 성장 잠재력과 세수 기반 자체를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주요국이 반도체와 AI를 둘러싸고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세수 호황기야말로 재정 부담 없이 전략산업의 기초체력을 보강할 적기라는 논리다.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노린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정부가 유망 분야를 선별하기 어렵고 투자가 호황 산업에 쏠리면 오히려 산업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둘째는 분배론이다. 호황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만큼 재정으로 그 온기를 취약계층과 내수로 확산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 성장이 쏠리는 양극화가 깊어지는 국면에서, 소외된 계층의 박탈감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지속이 불확실한 세수로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업황이 꺾였을 때 그 부담이 재정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반론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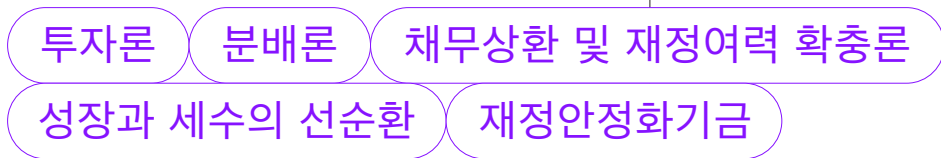
셋째는 채무상환·재정여력 확충론이다. 호황기 세수를 바로 지출하기보다 채무를 줄이고 불황기에 대비한 완충여력을 쌓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황기 초과세수를 적립했다가 세수결손이 난 불황기에 꺼내 쓰는 국가 차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여기에 닿아 있다. 불황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완충여력 확보야말로 미래 분배를 위한 저축이겠으나, 당장의 투자 기회와 민생 수요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현실의 선택은 한정된 재원을 셋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비율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함께 세수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호황이 일시적일수록 되돌리기 쉬운 선택이 안전하고, 구조적이라면 경직적 지출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불과 2년 전까지 대규모 세수결손을 겪었던 우리에게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어떤 배분을 택하든, 그 선택이 다음 세수 불황기에 어떤 청구서로 돌아올지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㉞

야 편성 가능하므로 세금이 더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대응 및 피해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위에서 가능했다.

회계연도가 끝난 뒤 쓰이지 않고 남은 세수는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는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결산상 잔액으로, 세입예산과 비교해 ‘더 들어온 돈’인 초과세수와 달리 ‘쓰고 남은 돈’이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처리는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뒤, 다시 그 잔액의 30% 이상을 국가채무상환에 써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며, 이후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해야 한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 처리라는 정해진 경로로 흘러간다. 만약 이 틀을 벗어나 초과세수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국가재정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초과이익 공유라는 숙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hjujung@seoultech.ac.kr

삼성전자 노사 단체교섭이 끝났다.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교섭이었는데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컸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파업 없이 일단락됐지만 많은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조합원만을 위한 교섭, 노조 정당성과 교섭 효용성 위협할 수도… 기업도 예상 못 한 초과이익 배분, 노사 교섭에만 의지하기 어려워
첫째로 초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전통적인 단체교섭의 허점을 확인했다. 이전에도 대기업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고, 노조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회연대임금 조성 등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처럼 예외적인 성과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을 위한 경제적 분배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노동조합은 그동안 인정받아 온 정당성을 부정당하고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도구인 단체교섭의 효용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이라는 재분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노조 내부의 기회주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내부의 불신과 외부의 문제 제기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에 유럽 대부분 국가는 단체협약을 조합원만이 아니라 해당 업종 내 모든 노동자에 적용하는 포용적 노사관계를 실현하고 있다. 시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가진 초대기업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재분배 방식은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에 고민을 남긴다.

둘째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과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내용은 노사의 주장이 절묘하게 봉합됐다. 회사는 초과이익 성과급(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50% 유지와 차등적 성과분배의 명분을 챙겼고, 노동조합은 10년간 특별 성과급이란 형태로 성과급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가전(DX) 부문 노동자들에게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배분됐고, 회사는 5조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DX 부문 노동자들이 크게 실망해 노조 탈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3만 5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노동자와 함께 일하지만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이번 같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분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노사 모두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섭을 주도했던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지난 6월 4일 이미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했고, 사측의 노사관계 관리 역량도 노조의 약점이나 파헤치는 수준임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교섭에 매번 정부가 개입해 OPI에 대한 절묘한 해법을 찾아주기도 어려운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OPI가 노사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기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교섭은 SK, 카카오, 현대차 등 다른 초대기업 노사교섭에도 유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쟁점은 성과급 교섭 자체가 아니라 성과급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있다. 특히 기업조차 예상치 못한 목표 대비 높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노사 모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이 확인됐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분배 노력을 기대하거나 노사 간 교섭에만 의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사회연대임금(스웨덴의 재분배 모델로 같은 업종 노동자에게는 기업 규모, 이익률 등과 상관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되기도 했으나 과거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산업별로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회연대임금을 제안한 취지가 산업 혹은 기업 내 보상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해외 사례들에 비춰보면 초과이익은 산업 경쟁력 제고 또는 위기 대응 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됐다. 기업은 초과이익이 기금이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초과목표 이익을 줄이려 하겠지만, 특별한 경제 상황에서의 호황과 기술 발전에 따라 시 기업 등에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초과세수

삼성전자 초과이익성과급(OPI) 노사 단체교섭
사회연대임금 초과이익 특별세



삼성전자의 DX 부문 직원들이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항의하기 위해 검은 옷 입기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 © 연합뉴스

를 거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0~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 모델 바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 살려 초과이익 특별세 도입, 교섭방식 확대 등은 고려할 만 다만 제조업의 초과이익 특별세는 횡재세(Windfall tax)와 달리 기업의 특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금이 아닌 특수한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세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정 산업에서 검은 특별세는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하청 및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에만 활용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초과이익 관련 세금이 특별세로 설계된다면 산업 발전에 활용돼 결국 개별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특별

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초과이익에 대한 교섭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확대해 협력 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법정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성과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된 근로자 대표제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교섭이 아닌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정규직 노조 및 사내하청 노조 또는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성과급 분배를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미 한화 오션 등 조선소는 하청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용자 및 과반 노조만 참여해 일부가 성과급을 독식하는 폐단은 줄일 수 있다.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을 줄이는 상생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과제가 아니므로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㉞

횡재세(Windfall Tax)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근로자대표제도

노사협의회

반도체 각 분야의 전통적인 강국, 강자 바뀔 수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sjoonkwon@skku.edu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향방은 ‘누가 어떤 지능에 특화된 고성능 높은 연산 칩을, 어디서, 얼마나,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특히 이는 칩의 제조와 설계로 분업화된 글로벌 공급망 지형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기존의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망 역학과는 구분될 밸류체인이 변화 속에서 AI 반도체를 둘러싼 주요 반도체 강국의 판도를 짚어본다.

대체 불가능한 제조력의 대만과 압도적 설계력 자랑하는 미국, 봉쇄 속 자립하는 중국과 부활 노리는 일본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이자 사실상 엔비디아와 구글, AMD, 퀄컴, 그리고 애플까지 칩 제조 전량을 맡기다시피 하는 대만의 TSMC는 계획대로 지난해 4분기 2나노미터(nm)급 N2 공정 제품의 양산에 들어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후면 전력 공급을 적용한 1.6nm급의 A16 공정과 N2 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N2P 공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A14, 2029년 A13/A12 등으로 로드맵이 계속 이어져 TSMC는 드디어 옹스트롬(0.1nm 단위) 공정에 진입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TSMC가 삼성전자와는 달리 2029년까지 어느 공정에서도 2세대 극자외선 노광기(High-NA EUV)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TSMC, 나아가 대만이 바라보는 AI 반도체 병목 지점은 트랜지스터의 집적 밀도 증가를 위한 노광 공정(빛을 이용해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후공정에 해당하는 CoWoS 같은 첨단 패키징이다. 실제로 TSMC는 최근 패

키징 공정 규모를 연평균 70% 이상 빠르게 증설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 고객사들의 AI 반도체 생산량은 사실상 TSMC의 패키징 증설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제품군인 파인만(Feynman) 역시 핵심 연산 다이(Die)는 TSMC에 둔다. AI 혁명이 대만 한 곳의 제조 역량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CPU 라인인 베라 루빈(Vera Rubin)이 올해 1분기 양산에 들어가 하반기 공급이 시작된다. 여기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288GB 규모의 HBM4가 함께 장착된다. AMD도 MI400 GPU 기반 헬리오스(Helios) 제품군으로 경쟁을 이어간다.

더 구조적인 변화는 맞춤형 반도체(ASIC)의 약진이다. 구글의 TPU 아이언우드, 아마존의 트레이니움(Trainium3), MS의 마이아 시리즈(Maia 200), 메타의 NPU인 MTIA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추론형 AI 영역을 잠식하며, ASIC 출하 성장률(44.6%)이 범용 GPU(16.1%)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AI 추론용 반도체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심지어 2028년에는 20~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응한 엔비디아의 전략은 지난 6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GTC Taipei 2026’ 기술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이른바 엔비디아 CPU가 장착된 PC 맞춤형 AI 시스템이다.

지난 4월 16일 대만 신주의 TSMC 사옥. © 연합뉴스



옹스트롬 공정

2세대 극자외선 노광기

CoWoS

하이퍼스케일러

맞춤형 반도체(ASIC)

압도적 설계 능력에 비해 미국의 AI 반도체 제조 능력은 제한적이다. 인텔의 A18 공정은 내부 제품(파이프라인상 전력효율형) 위주여서 외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부처는 2027년 A14로 넘어갔다. A14의 첫 대형 고객으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거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컴퓨팅 폴스택화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IT 기업 화웨이는 올해 자사의 NPU인 어센드(Ascend) 910C를 약 60만 개(2025년의 두 배)까지, 어센드 전 제품군으로는 최대 160만 다이까지 생산을 늘리며 중국 내 폭증하는 AI 반도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로 현재 중국에서는 EUV 없이 10나노 이하급 공정으로 AI 반도체를 대량 제조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장 앞서 있는 SMIC 역시 EUV 이전 세대 노광기인 DUV를 이용해 멀티패터닝하는 방식으로 7나노 공정에 이른 것이 양산 수준에서는 최선일 뿐이다.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AI 반도체 단일 칩 성능은 엔비디아 B200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되고 부족분은 대규모 클러스터로 메운다. 화웨이의 AI 데이터센터용 클러스터인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는 비슷한 성능의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에 비해 4배 넘는 전력을 쓴다. 이제 화웨이는 SMIC의 7나노 웨이퍼 및 일부 연구개발(R&D) 단계의 5나노 웨이퍼와 중국의 1위 D램 업체인 CXMT가 제조한 4세대 HBM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러한 하드웨어 제조 한계를 초기에는 물량 공세로, 중기 이후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공정 장비 확보 및 패키징 공정 개선 등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AI 모델-반도체-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AI 스택은 점차 하드웨어 층위에서부터 글로벌 표준과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0으로 수렴하는 흐름과 맞물려 이 이원화는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2022년부터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나노급 파운드리 팹 프로젝트인 라피더스가 지난해 4월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2나노 GAA 트랜지스터 시제품을 개발, 목표한 전기적 특성을 충족했다. IBM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멕(imec)과의 협력을 등에 업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소프트뱅크, 소니, 도요타, 후지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지만 실제 투입된 자본의 99%는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투자된 자금이 2조4천억 엔에 이른다. 그러나 2나노 공정 웨이퍼의 안정적인 양산까지는 약 5조 엔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고, 양산 경험 부재와 제한적 기술이전 의존이라는 약점도 분명하다.

규슈 구마모토현에서는 소니 팹을 재활용해 대만의 TSMC와

합작으로 설립한 JASM 팹이 이미 첫 번째 팹 완공 후 생산에 돌입했고, 두 번째 팹도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히로시마에는 일본의 엘피다(Elpida) 팹을 인수한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투자를 늘리며 D램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남아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기반으로 쇠락한 첨단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되살리며, AI 시대 첨단 반도체 생산 공급망에 재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기술 파트너로서 반도체와 AI 제조 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기술·지정학적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은 계속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사이클에 대응하면서 AI 맞춤형 반도체 선점하려는 각국… 한국은 차세대 패키징, 비실리콘 반도체 등 신기술에 투자해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앞으로도 설계, 소부장, 패키징, 제조, 메모리 등으로 세분화된 분업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국, 강자라 생각되는 국가와 업체의 판도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AI가 바꾸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의 기술 로드맵과 성능 지표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메모리반도체가 점점 AI 반도체를 향해 맞춤형 설계와 하이브리드 칩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은 기회이자 위기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최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주목하며 각국 내에서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중국의 CXMT는 자국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메모리반도체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생산과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친 우위를 HBM 같은 AI 맞춤형 메모리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 메모리반도체의 로직 다이 설계와 연계되는 파운드리,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임베딩 등이 반영된 설계 혁신으로 확장하지 못한다면, 이번 슈퍼사이클의 과실은 거두겠지만 다음 판의 주도권은 놓칠 수 있다.

한국은 각국과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 방향을 선점하며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옹스트롬 공정 진입 이후 반도체 제조의 공통적인 병목이 될 차세대 리소그래피(Lithography)와 패키징, 비실리콘 반도체, 양자컴퓨터와 연계되는 AI까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술에 선행 투자를 전략적으로 집행하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㉞

하이브리드 칩 하드웨어 임베딩
 차세대 리소그래피 첨단 패키징

“지금의 호황으로 얻은 자본과 협상력을 AI 모델, 에이전트 생태계로 옮겨가야”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31년간 삼성전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통상부 제조업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 그의 명함에는 ‘반도체교육원장’이라는 직함도 적혀 있다. 초등학교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반도체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교육원과 시스템 아키텍트(Architect, 반도체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개별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는 기술 총괄자)를 육성하는 AI반도체설계전문대학원을 이끌며 차세대 반도체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를 만나 우리 반도체산업의 미래 전략을 물었다.

○ 최근의 AI 수요로 시작된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메모리반도체산업은 통상 2~3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해 왔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PC와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 출시 주기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크고 개인이 같은 기기를 여러 대 살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수요 증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AI 데이터센터가 주도하고 있어 공급자 주도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AI 칩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주문형 반도체다. 지금까지의 범용 D램과 달리 선주문 후생산 구조를 띤다. 즉 과거처럼 전형적인 등락 곡선을 그리기보다 AI라는 구조적 수요를 바탕으로 길고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간의 투자 경쟁에서 뒤처진 주자가 생겨 시장에서 투자 속도가 조절되는 경우고, 둘째는 글로벌 메모리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증설 물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국 기업들의 범용 제품 추격이 맞물리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 리스크다.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의 역학 관계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 메모리반도체 선주 주자인 우리나라 또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으로 분류되는 팹리스나 파운드리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메모리반도체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은 고객사가 세부 사양을 정해 주문하는 맞춤형 메모리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전 메모리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설계 능력은 필수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팹리스 3,600개라는데 우리는 100개뿐’이라는 식의 단순 양적 비교는 의미가 없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뚝뚝한 기업’ 몇 개가 더 필요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기업을 단 몇 개라도 육성하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 글로벌 경쟁국들의 반도체 굴기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어쩌면 이번 슈퍼사이클은 한국에 두 번 오기 어려운 기회일지 모른다. 현재의 AI 생태계 경쟁은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AI 모델과 데이터, 칩, 그 위에서 운영될 소프트웨어와 에이전트 등 모든 분야가 전장이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메모리반도체라는 하드웨어 레버리지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 AI 인프라 병목이 메모리에 있는 한 한국은 결코 작은 플레이어가 아니다. 다만 이 레버리지엔 유효기간이 있다. 하드웨어 호황으로 얻은 자본과 협상력을 AI 모델, 플랫폼, SaaS, 에이전트 생태계로 옮겨야 한다. 슈퍼사이클은 언젠간 꺾이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흑자를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AI 생태계에 투자한다면 하드웨어 강국에서 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AI 반도체시장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AI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시장이 큰 시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의 주력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파고들 틈이 좁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엔 가전·자동차·방산 등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완제품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의 제품에 탑재될 칩이 우리 팹리스가 독자 개발한 국산 칩이라면 어떻겠나. 엄청난 시장 기회가 열릴 것이다.

○ 산업통상부 M.AX 얼라이언스에서도 자동차, 기계·로봇, IoT, 방산 등 4대 분야의 특화칩 개발을 강조하셨다. 이 전략이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로봇 등 개별 기기 내부에서 작동해야 하므로 전력, 발열, 크기, 가격 등 제약이 크다. 게다가 제품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위험성이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많아져야
한다. 실패하면 오히려
칭찬받고 더 지원받을 수 있는
R&D 체제가 만들어져야
그 실패에서 성공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로는 효율성과 차별성을 갖추기 어렵고, 맞춤형 시스템온칩 (SoC)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M.AX 얼라이언스의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팀 체제다. 과거엔 팹리스가 칩을 설계해 수요 기업에 찾아가 세일즈를 했다면, 이전 칩을 쓸 완제품 기업이 자사 제품에 필요한 스펙을 먼저 기획하고 이를 구현할 팹리스를 선정해 처음부터 한 팀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확실한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 기획 단계부터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밀접한 협업 구도로 진행돼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결국 인재가 관건인 것 같다.

대학 교육의 가치를 무시할 순 없지만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이론과 지식의 암기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정보 확인이나 단순한 지식 습득의 영역은 이제 AI가 사람을 대신한다. 결국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일에 대해 갖는 열정, 타인과 협업하며 같이 성장한다는 마음가짐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설계·공정·패키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위 심사도 논문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교육체계 전환과 더불어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파격적인 보상과 연구개발(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 수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해 화제였는데, 초과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정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R&D 투자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원천기술 개발 과제 성공률이 95% 이상인데, 성공 확률이 너무 높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이 많

다. 과제에 실패하면 무능력한 연구자로 낙인찍히거나 새로운 과제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위험성이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많아져야 한다. 정부는 대학이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실패하면 오히려 칭찬받고 더 지원받을 수 있는 R&D 체제가 만들어져야 그 실패에서 성공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다음 반도체 공장은 한국이 아닐 수 있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단순한 으름장은 아닐 것이다. 전력·용수 공급 문제와 인프라 구축 지연 등 국내 투자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도체는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무수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물류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만든 최적의 계획이 지금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다. 기존의 계획을 신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공장의 해외 이탈을 막고 국내 투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정부의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시스템반도체 성장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 영역에서 균형잡힌 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 1등을 유지하면서 팹리스 역량 강화와 AI 반도체 국산화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이뤄낼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

이강선 『나라경제』 기자



“메모리반도체 이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총력 다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일시—2026년 6월 11일(목) 오후 3시
장소—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

○ 곧 취임 1주년입니다. 그간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경,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긴박한 정책 대응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 초 중동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외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해 서민경제 안정을 꾀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얻은 그간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세 가지 숫자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기관과 IB 역시 올해 우리 경제성장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분기 8위였던 것이 올 1분기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죠. 증시는 또 어떻습니까. 새 정부 출범 당시 시가총액 13위에서 세계 7위로 도약했습니다. (6월 23일 기준)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으신데요, 상반기 전략과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중심 비상대응체계 운영, 추경 등 신속 대응으로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구조적 편중 극복이라는 정책과제가 부각됐지요. 다행인 점은 시발 반도체 호조로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경제대도약의 골든타임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성장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전쟁으로 얻은 교훈을 토대로 K-공급망·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을 추진하려 합니다. AI 대전환(AI), 녹색 대전환(GX)과 같은 초혁신경제 가속화와 지방주도성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양극화 완화, 구조혁신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구조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구조혁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구조혁신 과제는 교육, 즉 시대에 맞는 인력양성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AI 인프라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교육은 초·중·고·대학이라는 전통적인 모델로 이뤄지다 보니 AI 교육 부족, 그에 따른 인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애주기별 AI 교육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정부·민간의 AI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AI 인재양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는 청년 대상 에이전틱 AI 교육현장을 방문했는데, 훈련 관계자부터 교육생까지 그 열의가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적어도 1천 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만 명,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한편 AI를 포함한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입니다. 지난해 AI에 이어 올해 4월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선제적 규제혁신에 더해 향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하려 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구조혁신장관회의를 운영해 시급한 구조혁신 과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관 프로필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행정학 석사,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 중앙대 무역물류학 박사
- 1999.5.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 2003.5.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 2006.5.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 2007.12.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 2008.7.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자문관
- 2013.4.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재정성과심의관
- 2015.10.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2017.8.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2018.12. 기획재정부 제2차관
- 2020.5. 국무조정실장
- 2022.8.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 2023.2.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2025.7.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6.1.~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잠재성장을 반등은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AI의 눈이라 할 센서반도체, 전력효율을 높이는 전력 반도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초혁신 과제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산업 생태계가 잘 돼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데다 초고속망이 구축돼 있고, 거기에 흐를 데이터까지 풍부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행정·금융·국방·물류 등 국가기간전산망이 구축됐거든요. 모든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화한 거죠.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공·행정 데이터에 더해 세금과 건강보험 데이터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규제혁신을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걸 활용해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관련 책을 집필했을 정도로 AI라는 주제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 오셨는데,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보통 AI를 생각할 때 챗GPT를 활용해 정보를 얻는, 쉽게 말해 검색을 의존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에이전트 AI를 활용해 자신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진정한 AI 활용이죠. 『나라경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정·교열·편집을 해왔을 텐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킨 뒤에 앞으로 발간할 내용을 편집해 보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고 결과가 좋을 거예요. 언론사 관계자들도 AI가 기사 제목을 너무 잘 뽑는다면서 본인들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렇게 AI가 가져온 것에 사람이 가치를 더하면 훨씬 좋겠죠. AI 결과물에 가치를 더하고 그걸 다시 학습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밸류가 스며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정책에도 녹여내려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나요?

AI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최신 기술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기화 영향으로 청년들의 고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후속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의 근본적 역량 강화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혁신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성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상품·레시피·친환경소재 등 기술개발과 브랜딩·마케팅 등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동전쟁의 여파가 큰 중소기업에는 25조9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촉진형’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시며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주택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데, 이를 위해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이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대출규제 역시 실거주자 중심으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수요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과 혁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물길을 돌려나가겠습니다.

○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6월 시행됐는데, 대미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으신가요?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공급망 협력 기회 확보, 전략산업 성장 등 국내 환류 효과도 이끌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오랜 시간 공직에 계시면서 품었던 철학이 있으실까요.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를 바꿔나가야만 자기만의 도약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당연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를 고민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적응하지 못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도 시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속된 말로 계속 뭔가를 저지르잖아요?(웃음) 옛날부터 뜯어고치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쪽으로는 우리가 최고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고 목표하시는 게 있다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모판에 범씨 뿌리듯 미래 먹거리의 씨앗을 여러 개 뿌리고 있고요,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더라도 그중에 2~3개 정도는 잘 자라나 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미래 성장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질의·정리 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1 Issue

극과 극, 심화하는 청년 자산 양극화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자산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20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무려 19배에 달하며 압도적인 자산 격차를 보였다.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크게 벌어지며 노력만으로 올라설 수 없는 현실. 무엇이 청년 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했을까.

『나라경제』는 청년 자산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을 짚어보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해 봤다. 특히 연구자와 활동가 등 청년 당사자들이 현실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장의 빛이 모두에게 닿을 때 그들은 열어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년에게 희망의 온기가 고르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yunkim@korea.ac.kr

청년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인생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등 신속한 제도적·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인생의 기회와 사회 이동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 지표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20~39세) 자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9억3,022만 원과 2,301만 원으로 격차가 약 40.4배에 달한다. 40세 이상 기성 세대 내 격차(97.1배)보다 수치 자체는 낮지만 청년기에 형성된 자산 불평등이 부모 세대의 자산 상속 등으로 향후 더 심한 자산 불평등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가볍지 않다.

청년 세대 내 평균 순자산 격차 약 40배 달해…

상속,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결정적 원인

개인 부채의 질적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을 내 투자)', '마통(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을 구입한 청년층과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비, 고금리 소액대출에 시달리는 청년층 사이에서 부채의 성격도 양극화되고 있다. 상위층 청년에게는 자산 투자 과정에서 생긴 부채일 수 있지만 하위층 청년에게는 극한 상황 속 감당하기 힘든 부채가 되고 있다.

청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적 원인에는 자산의 세습과 자산시장의 폭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중첩돼 있다. 이 가운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부모로부터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을 지원받았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좌우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모 찬스(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됐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재현되고 있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선점한 청년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를 누리며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자력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비생산적 자산에 자금이 묶이거나 학자금 및 생활고 대출로 인해 자산형성의 초기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이는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수저 계급론'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세습의 전형적인 결과다.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구는 2019년 이후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9년 청년층 가구 소득 상위 20% 그룹과 하위 20% 그룹의 금융자산 격차는 약 3.7배였지만 2024년에는 이 수치가 4.7배로 확대됐다.

청년층 내부의 소득 격차는 단순히 소비 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투자를 위한 종잣돈의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자산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은 저축과 투자로 추가적인 자산소득을 마련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한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저축 가능성을 상실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격차는 확대된다. 노동소득을 모아 자산을 만드는 속도가 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다.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시장의 구조적 장벽은 자산 격차를 확대한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 연합뉴스

다.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종자돈의 유무가 자산 격차를 키운다. 여유 자본이 있는 청년들은 코스피 폭등 시기에 공격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투자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무리한 대출 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채권, 토권 증권 등 자산시장 다변화로 금융 지식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른 격차도 커졌다. 자산 여유가 있는 가구의 청년들은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부모의 자문,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다각화된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시급하거나 금융 정보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고금리 적금 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한탕주의식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노력하면 상향 계층 이동 가능하다’는 능력주의 가치관의 붕괴… 결혼·출산 양극화, 노동 의욕 상실, 계층 간 혐오로도 이어져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는 청년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과거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열심히 노력하면 상향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능력주의 가치관과 믿음이 붕괴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70.4%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절망감이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산 양극화는 결혼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자산을 선점한 청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가정을 이루지만 자산형성에 실패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기적으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3년 0.72명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이러한 경향에는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 및 주거 불안정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산에 따른 부동산 세습이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원천 차단하면서 청년들의 무력감과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 양극화가 가져오는 커다란 사회적 부작용은 청년 세대의 전반적인 노동 의욕 상실이다.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큰 부를 만드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청년층의 구직 단념(‘그냥 쉬었음’) 현상이 커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여차피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체념은 취업 동기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조기 퇴사와 구직 단념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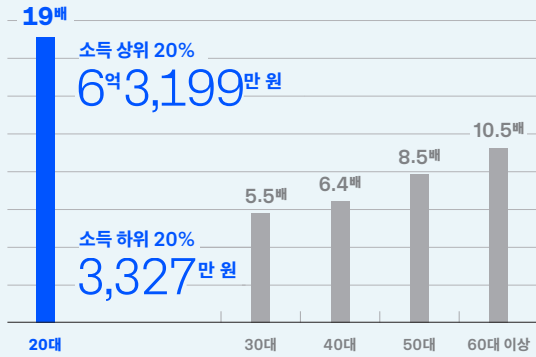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자산 양극화는 청년 세대를 위험한 투기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자력으로 정상적인 자산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청년층 전체를 신용불량이나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향후 채무 조정과 복지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양극화는 공간적·사회적 분리와 단절을 심화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한 대로 사회적 차원의 ‘구별 짓기’를 확대할 수 있다. 특정 선호 지역에 진입한 청년층과 주변으로 밀려나는 청년층 사이에 공간적 장벽이 생기고, 이는 소비 성향이나 문화적 취향의 격차로 이어져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성공한 청년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산이 오직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 믿고, 낙오된 청년들은 구조적 불평등의 피해자임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굴욕감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적 신뢰가 약해지고 단절과 계층 간 혐오를 악화시킬 수 있다.

청년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인생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다. 이런 현실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일어나는 국제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부동산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등 신속한 제도적·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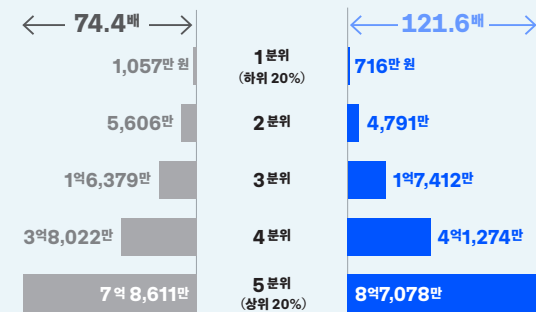
20대 평균 순자산 격차, 모든 세대 중 압도적 1위

2025년 세대 내 평균 순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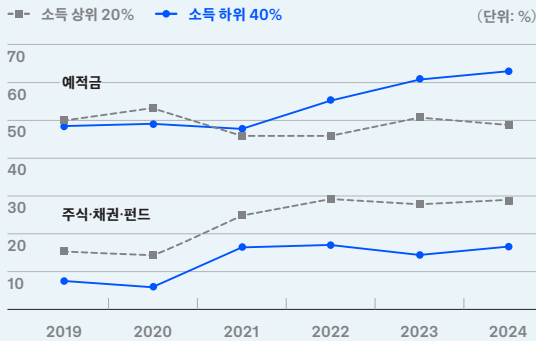
자료: KBS 뉴스, 2026

2030 부동산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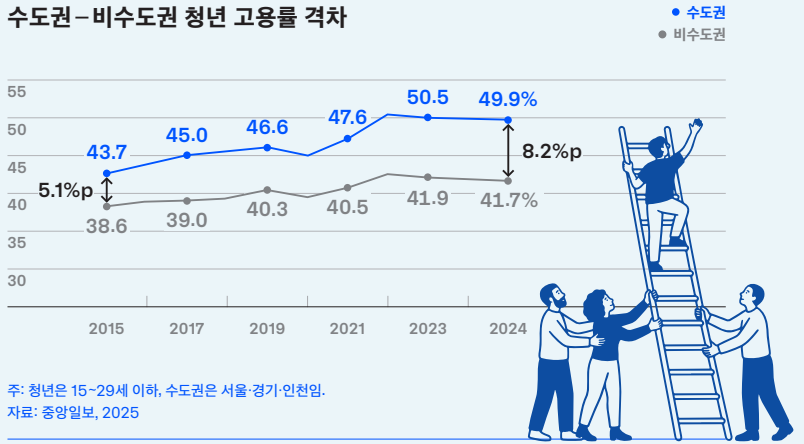
주: 분위 구분은 순자산 기준,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금액 + 거주주택 외 금액 + 계약금 중도납입액
자료: 국민일보, 2026

청년층 가구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항목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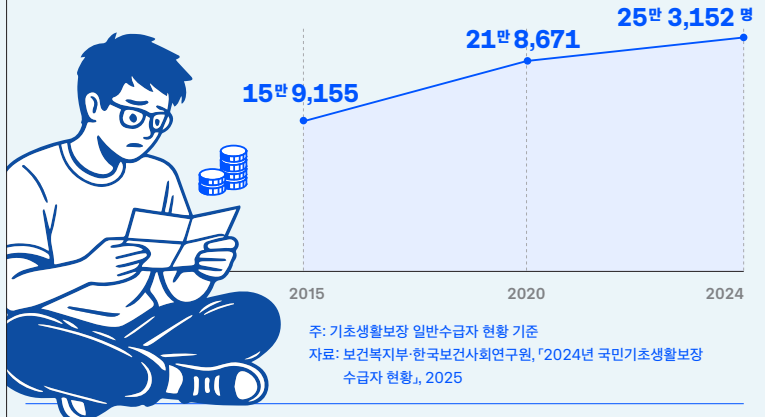
주: 청년층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9세인 가구 기준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 2025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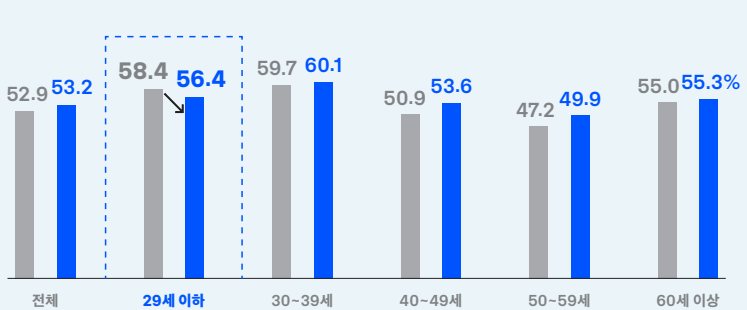
주: 청년은 15~29세 이하,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임.
자료: 중앙일보, 2025

2030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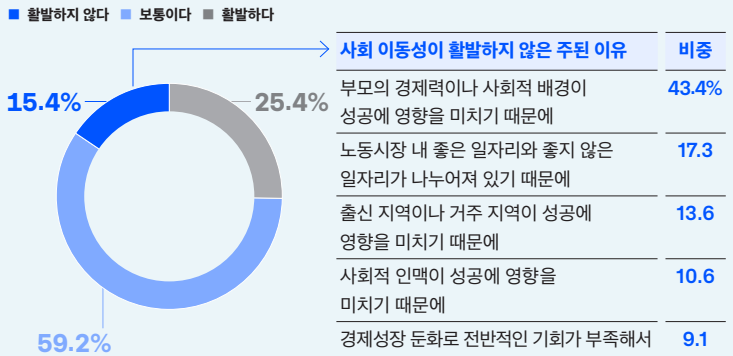
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 비중 추이



주: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2026

사회 이동성 인식



주: 전국 19세 이상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동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2025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저축 장려 넘어 스스로 자산 굴리는 힘 키워주는 정책으로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mkkim@kcmi.re.kr

지난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서울 성동구 독성역사거리 인근에서 출근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청년 미래적금과 함께 투자로 가는 문을 처음 여는 생산적 금융 청년형 ISA가 선보인다. 이미 ISA 계좌가 있더라도 중복 개설할 수 있다. 반가운 변화다. 다만 환영에 앞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생애주기에서 청년기는 시간과 복리의 힘을 가장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런데 20·30대 청년 가구의 가계금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청년의 금융자산 상당 부분이 전·월세 보증금에 묶여 있고 주식·펀드 같은 금융투자 비중은 낮다. 특히 저소득 청년일수록 자본시장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은 부동산과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다른 한쪽은 보증금에 돈이 잠겨 좀처럼 불리지 못한다. 실제로 전체 청년 가구 중 상위 20%가 가진 순자산 비중은 몇 년 새 절반을 넘어 60%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벌어진 출발선은 생애 전반의 불평등으로 고착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일관된 경고다.

그동안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대체로 ‘저축’ 중심이었다. 이제는 저축 장려만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정해진 이자를 주는 적금은 초기 종잣돈 마련에는 유효하지만 장기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적립하면 감내할 만한 위험 안에서 적금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더 큰 효과는 ‘경험’이다. 투자에 서툰 청년이 안정적인 분산투자를 몸으로 익히는 과정 자체가 평생의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는 살아 있는 금융교육이 된다.

청년형 ISA 부활은 중요한 전환이다. 관건은 새로운 제도들이 제각각 흩어지지 않도록 잇는 데 있다. 첫째, 적금과 투자를 양자택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는 중복가입이 막혀 있다. 자칫 저소득 청년은 적금만, 여유 있는 청년은 투자까지 택하는 구도가 돼 되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여러 상품에 함께 가입하되 인센티브의 총량을 정해 관리한다면 모든 청년에게 저축과 투자를 병행할 길이 열린다.

둘째, 생애주기로 잇는 설계가 필요하다. 아동기 계좌에서 청년기 적금·ISA로, 다시 연금저축·IRP로 만기 자금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적립→형성→재투자’의 자동 전환 경로를 만들면 단발성 목돈이 평생의 자산으로 이어진다. 정보 접근이 약한 청년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입을 기본값으로 두는 자동가입 방식(opt-out)도 고민할 만하다.

셋째, 계좌에 교육과 상담을 묶어야 한다. 계좌 하나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일본이 중립적 금융상담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듯 가입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함께 건네야 투자가 무모한 벵이 아닌 자립의 도구가 된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결합할 때 비로소 ‘자산관리 역량’이라는 값진 자산이 청년에게 남는다.

저축의 안정성과 투자의 성장성을 한 사람 안에서 연결하고, 생애 전반으로 이어주며, 형편에 따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적 보편주의로 설계할 때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비로소 격차를 좁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자본시장이 항상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청년 자산형성 정책 목표가 ‘얼마를 모았나’에서 ‘스스로 자산을 굴릴 힘을 길렀나’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을 통해 새로 연 투자의 문을 격차를 벌리는 통로가 아니라 모든 청년이 함께 지나는 문으로 만드는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

뭐라도 해보려다 부채 떠안은 청년 늘어... 청년연금 등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할 사전적 지원 필요

일시—2026년 6월 16일(화) 오후 3시
장소—서울 공유와 공감
대담—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좌장 겸)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기홍—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자산 격차와 원인, 현행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한다. 청년이라 하면 보통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로 따지면 5년 차 정도 된 사람들이라 생각해 이들 간에 자산 격차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격차가 꽤 나서 깜짝 놀랐다.

김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가 무려 19배에 달했다고 한다. 그 수치를 봤을 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부모 세대의 경우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언젠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의 산업화가 그 기대를 보장해 줬다. 그러나 함께 성장하던 시대를 지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부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면서 같은 세대 안에서 출발선의 차이가 벌어졌다. 여기에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자산 증식의 기회가 열리면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결과가 지금 20대 자산 격차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기홍— 저도 같은 기사를 봤다. 2017년만 해도 20대 내 자산 격차는 6배로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작았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가장 크고 9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더라. 그 기사를 읽는 청년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됐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다.

김설— 그렇다. 자산 격차라는 벽이 노력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최근 명품 매장에서 오픈런으로 2~3시간씩 기다려 가방 등을 구매한 청년들을 인터뷰 한 기사를 봤다.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수익으로 명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 명품 소비는 자산을 형성한 청년에게는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은 SNS에 명품이 전시되는 걸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서원— 공감한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로 이전되면서 청년 세대

내 격차가 사실상 확대되고 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부동산이 아닌. 최근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청약 등으로 계약 해지가 된 물량 세 채가 청약으로 나왔다. 주변에 투자 좀 하는 청년들이 “안 넣으면 바보다,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해서 조사해 봤다(웃음). 2020년에 최초 분양가가 6억 정도였던 아파트인데 현 시세는 10억으로 당첨만 돼도 4억의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물이었다. 현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대출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혹하더라.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매월 몇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거였다. 부모로부터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기홍— 시작부터 격차가 벌어지면 그 간극을 다시 좁히기는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나.

정서원— 심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부모의 부채를



“의외로 우리나라 사회 이동성 지수는 OECD 평균이라고 한다. 사회 이동성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배경에는 평등한 교육제도가 있다. 그렇다만 우리는 왜 사회 이동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지적된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왼쪽부터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물려받거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청년에게 자산이 없다면 당장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중고·삼중고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층을 이동할 방법들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져 있다.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고 본다.

김설 — 서울에서 일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말하길 대기업,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 상위 15~20%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단지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다. 신용을 얻기 위해서라더라. 신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차입투자를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을 하고 싶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려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금융권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고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김기홍 — 요즘 청년들은 예전과 달리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고 인식해 금융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보인다.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번 위치가 정해지면 그걸 바꾸기도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 이동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

김설 — 사회 이동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거 형태라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다행히 부모님의 집이 점점 넓어졌다(웃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와 경험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그런 기대가 남아 있지만 서울에서는 확실히 무너졌다고 본다. 6~7년 전까지만 해도 2억 정도였던 아파트 전세가가 최근 몇 년 사이 4~5배 올라간 상황을 보며 결국 모아둔 자산이 있거나 신용으로

대출 가능한 사람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서원 — 사회 이동성은 경력 전환 등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삶의 도약이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부모가 지원해 주거나 목돈이 있다면 다른 걱정 없이 본인에게 충분히 집중하며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은 집세, 생활비 등으로 매월 소득의 대부분이 지출된다. 한 달 벌어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자기 계발은 꿈과 같다. 당장의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 이동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김기홍 — 부모 세대보다 이동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나라 사회 이동성 지수는 OECD 평균이라고 한다. 사회 이동성이 괜찮다고 평가받는 배경에는 평등한 교육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회 이동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지적된다. 똑같이 교육받아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이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설 — 최근 삼성전자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 이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마치 ‘야수화된 민주주의’의 현실판을 보는 듯했다. 그들은만의 리그에서는 더 많은 욕망을 향한 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최저임금 같은 철저한 룰이 요구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과 고소득층 사이에 철저한 단절이 생겼다. 한때 노동시장에서는 연대나 평등을 외치며 이러한 단절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린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

정서원 —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처음 얻는 일자리의 40%가

계약직이라고 한다. 청년을 위해 만든 공공 일자리나 인턴도 11개월, 8개월, 6개월짜리 단기적인 경우가 많다. 다수가 정규직과의 차이를 체감하긴 하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행사하거나 주장하지 못해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김기홍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해 주셨다. 한때는 노동시장에서 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예전에는 수습사원으로 입사해도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다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이 더 이상 그걸 믿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제도적 보호나 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데, 주식시장 호황으로 수익을 얻어 굳이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더라. 노동의 가치가 절하됐다고 보시나.

정서원 — 그런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당장 1시간 일하는 것보다 상승 종목에 투자하면 5~10% 수익을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노동이 무의미해지고 자산 규모에 따른 일종의 패배감이나 무력감도 번지는 것 같다. 그러나 주식은 시드머니도 필요하고 마냥 계속 오르지만은 않는다.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 주식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등 하락장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동소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산으로 버는 돈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 가치가 다소 절하된 측면은 있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키워 노동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김설 —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노동에 가치를 느낄 수 있을 텐데, 현재 청년들은 비상용으로 마련한 돈이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을 끌어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형성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주식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버랑 끝에 몰려 투자를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20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매일 출퇴근하며 경력을 쌓아 다음 커리어를 차분히 그려나갈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기홍 — 다음으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자. 양극화 해소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빈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시나.

김설 —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치고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성인이 된 이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즉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정서원 — 동의한다. 청년 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양적으로는 많이 체감된다. 다만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를테면 1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10만 원 중 만 원을 감면해 주는 소액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김기홍 — 자산시장이 굴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그 흐름을 조정한다든가 격차를 좁히는 데 정부도 여러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자산형성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정서원 —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을 납입해야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의 다음 버전인 청년미래저축 등인데 전반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이 접근하기엔 쉽지 않은 구조라 아쉽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저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산형성 감각을 기르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김설 — 성인이 된 이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부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적립해 20세가 됐을 때 기초 자산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청년연금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출발

선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정책에도 정부가 더 투자해야 한다. 부모 지원 없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월 30~40만 원 정도를 학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더 많은 재원이 고용정책에 투입돼야 한다. 아울러 자산형성 지원금이 목돈 마련에만 쓰이기보다는 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 크레딧 형태로 지원될 필요도 있다.

김기홍 —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산형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최근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설 — 부채가 있는 청년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채무조정을 받아야 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진입차 운전이나 배달업에 뛰어드는데, 차량을 구매할 돈이 없어 리스에 의존해 부채를 떠안게 된다. 능력이나 기술이 없더라도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을 통해 본의 아니게 부채가 쌓여 결국 신용유이자(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다.

정서원 —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하다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뭐라도 하려면 교육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그 비용이 본인이 소유한 목돈의 수준을 넘어 서면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그 와중에 생계를 이어야 하니 또 소액의 생활비를 대출받게 된다. 20대의 대출 이자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몇천만 원씩 거금을 빌렸기 때문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년 지원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각자 처한 상황과 과제가 다른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원을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아니다. 소액 대출과 높은 이자 부담이 반복되면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김기홍 — 일자리 진입 전부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사회가 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부채까지 떠안게 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산 강화 해소를 위해 생각하신 방안이 있다면.

정서원 — 우선,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잘 편입돼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은 기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청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년 지원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청년 지원사업은 대체로 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지원 기간, 사용처 등에 제한이 많은 편이다. 청년수당이 비교적 큰 효능감을 발휘한 이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청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각자 처한 상황과 과제가 다른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원을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인지하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의 전환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설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양한 재분배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이행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청년들은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형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공공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향후 커리어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 소득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세대 내 격차나 여러 불안 속에서도 감내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

김기홍 — 좋은 제안이다. 저는 정책 패러다임을 ‘출발선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자원 확보와 사회적 연결을 통한 연대의 재건이 필요하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황현성 『나라경제』 기자



지난 4월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 티저(Tiszai)당이 승리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16년간 이어진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 연합뉴스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고소득자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축소, 금융 규제 완화 등—은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 확대 효과를 증폭시키는 ‘친부유층(pro-rich)’ 정책으로 작동했다.

**경제적 대립 넘어 정서적·정치적 분열 낚는 양극화…
공정한 분배 구조 위에서만 민주주의도 지속 가능**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상은 각국의 제도적 전통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제조업 쇠퇴가 맞물려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됐다. 노동조합 약화와 경제적 불만을 겪은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분노가 이민·인종민주주의와 결합하며,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사법·언론·선거 등 민주적 제도의 심각한 침식을 초래했다.

한편 헝가리의 사례는 절대적 소득 불평등 지수가 비교적 낮더라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체제 전환 이후 서구식 번영에 대한 기대가 반복된 경제 위기로 좌절되면서 헝가리 대중은 강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오르반 빅토르(Orbán Viktor) 총리는 이러한 불만을 반엘리트주의와 민족주의 포퓰리즘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권력을 장악하고 합법적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총선은 16년간 지속된 오르반 정권을 종식시켰다. 부패, 언론 장악, 사법 통제 등 ‘국가 포획(state capture)’ 논란에 휩싸였던 그의 체제는 결국 강한 민심 이반 앞에 패배했다.

인도의 경우 고도성장의 과실이 최상위층에 극단적으로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발생했다. 집권 인도인민당(BJP)과 힌두 민족주의 조직은 경제 불평등 문제를 종교-공동체 이슈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무슬림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하는 다수지배 정치를 추진했다. 반면 브라질은 경제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룰라 정부 등이 추진한 현금 이전 프로그램 등 빈곤 완화 정책과 경쟁적 선거 제도가 작동하며 극단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대중영합적 권위주의 지도자를 배태함으로써 21세기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서서히 침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이다. 다수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제적 대립을 넘어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정서적·정치적 분열을 초래한다.

민주주의의 생존과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선거 중심의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분배 정의 실현과 붕괴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누진세 체계의 정상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기회 균등 보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백신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강건성은 부의 편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대다수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공정한 분배 구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㉞

N.LIGHT

“피지컬 AI 학습시키는 3D 데이터 시장의 주도권 쥘 겁니다”



박진영

엔닷라이트 대표

지난 6월 8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엔비디아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AI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피지컬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는 그의 독려에 스타트업 대표들이 호응하고 열광했다. 그 자리에 엔닷라이트도 있었다. 젠슨 황은 왜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했을까. 어떤 가능성을 봤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선택한 스타트업 중 하나인 엔닷라이트의 박진영 대표를 만났다.

가상환경에서 로봇 훈련시킬 3D 데이터 만드는 회사... 시제품 공개 두 달 만에 5억 원대 납품

“엔닷라이트는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이 가상환경에서 먼저 배우고 그 경험을 현실로 옮겨오도록 돕는 3D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창업 6년 차에 피지컬 AI에서 빠른 성장 가능성을 찾은 박 대표의 말이다. 피지컬 AI를 활용하려면 로봇에게 현실에서 움직이는 법을 학습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서 로봇을 굴러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느리고, 비싸고, 때론 위험하다. 그래서 로봇은 가상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먼저 학습한 뒤 이를 현실로 옮겨온다. 이른바 ‘심투리얼(sim-to-real)’이다. 학

습 무대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다. 문제는 그 무대에 올릴 3차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모델도 시뮬레이터도 준비됐는데 정작 로봇에게 학습시킬 3D 데이터가 없어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겉모양만 있는 메쉬 데이터(mesh data)로는 안 된다. 로봇이 냉장고 문을 여는 법을 배우려면 경첩이 어떤 구조로 연결됐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열리는지 무게와 마찰 같은 물리 정보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심레디(Sim-Ready)’ 데이터라 부른다. “게임에 쓰는 메쉬 데이터는 형상만 알아요. 우리는 캐드(CAD) 데이터라서 물리적 힘의 크기까지 압니다.” 박 대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3D 기술이 형상만 빛는 메쉬에 머무는 사이 엔닷라이트는 정밀한 수치를 담은 설계 데이터를 만든다.

엔닷라이트의 무기는 자체 개발한 3D 엔진 ‘트리닉스(TRINIX)’다. 문장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수십 초 만에 캐드 데이터를 만들고 기업이 가진 낡은 설계 파일에서 빠진 물리·관절 정보를 AI가 추론해 채워 넣는다. 가상에서 학습한 결과와 현실의 오차를 측정해 데이터를 거듭 다시 만드는 보정 과정까지 자동화했다. “심레디 데이터의 경우 다들 여전히 사람을 혹사시켜 만들지만 우리는 빠르고 싸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캐드 엔진을 가진 회사는 손에 꼽고 그마저도 거대 기업이라 이러한 새로운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판단이었다.

박 대표가 심레디 데이터 시장의 크기를 자신하는 근거는 단순하다. 학습에 쓸 3D 데이터가 세상에 거의 없

**“딥테크는 10년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모험자본이 과연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이 기다리지
못한다면 정부 자본이라도 인내자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는 것이다. “실물 제품의 3D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저 캔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책상 위의 사이드 캔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다루는 AI 학습 데이터 공급 시장이 이미 수십조 원 규모로 커진 점을 떠올리면 빈 채로 남은 3D 데이터 시장의 잠재력은 가능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3D 데이터 시장이 얼마나 폭발할지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지난해 4월 AI와 캐드 엔진이 결합된 시제품을 내놓자 두 달 만에 한 대기업에 5억 원대로 납품됐다. 휴대전화부터 냉장고, 세탁기까지 제품 설계 자동화가 시작했다. 지금은 현대·LG·삼성의 여러 팀과 동시에 과제를 진행한다. 엔비디아와 대기업, 엔닷라이트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넣어야 로봇이 잘 배우는가”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의 표준이 정해질 것이고 그 표준을 쥐겠다는 것이 박 대표의 전략이다.

**엔비디아와 협력하되 데이터와 표준은 주도권 쥌 것...
올해 매출 10배, 조직 5배,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이 목표**

이처럼 엔닷라이트가 밀접하게 함께 일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인연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박 대표와 절친한 실리콘밸리의 한 대학 교수가 다니는 요가원에 엔비디아의 고위직 부부가 있어 소개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 엔비디아 코리아의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인 인셉션 담당 임원이 한 전사회에서 엔닷라이트를 발견하고 박 대표와 연결해 주려던 관계자였다. 이를 기점으로 2023년 엔비디아 인셉션에 들어간 데 이어 엔비디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 프로그램에도 합류했다. 덕분에 올해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GTC 콘퍼런스에서는 엔닷라이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엔비디아라는 우군을 얻되 데이터와 표준은 한국이 쥐면 된다”고 답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김치 공장부터 반도체까지 만드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해요. 공장도 데이터센터도 다 비슷하니 우리가 엔비디아와 함께 먼저 만들어 표준으로 깔면 모델도 데이터도 로봇도 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길었다. 박 대표는 대학 시절 싸이월드 미니홈피 스킨을 팔아 도토리를 벌며 창작자에게 돈을 주는 생태계에 눈똥다. 대학 졸업 후 2009년 삼성 전자에 입사해 갤럭시S팀에서 일했다. 그때 3D 엔진을 개발하던 입사 동기와 결혼했다. 이후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박 대표에게 남편은 “나랑 창업하려면 무조건 캐드를 하자”고 못 박았다. 수십억 원짜리 외산 캐드 엔진을 살 수 없어 직접 만들기로 한 부부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캐드 엔진 개발에 매달리는 생활을 5~6년 한 끝에 2020년 1월 엔닷라이트를 창업했다. 3D 프린터 교육용에서 시작해 메타버스로, 다시 피지컬 시로 타깃 시장을 옮겨갔지만 “누구나 쉽게 쓰는 캐드 툴을 만들겠다”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엔닷라이트의 경쟁자는 만만치 않다. 특히 엔비디아 출신이 세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라이트휠은 올해 1분기에만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그만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엔닷라이트가 실리콘밸리 경쟁사에 비해 미국시장에 덜 알려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번에 새로 투자받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시장에서 회사를 알리는 데 쓸 계획이다.

정부 정책을 향한 진단은 날카롭다.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딥테크는 10년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모험자본이 과연 그렇게 기다려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이 기다리지 못한다면 정부 자본이라도 인내자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그는 정부가 실증 기회를 넓혀 대기업이 부담 없이 스타트업 기술을 도입하도록 돕는 최근의 흐름엔 후한 점수를 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 엔닷라이트도 3D 데이터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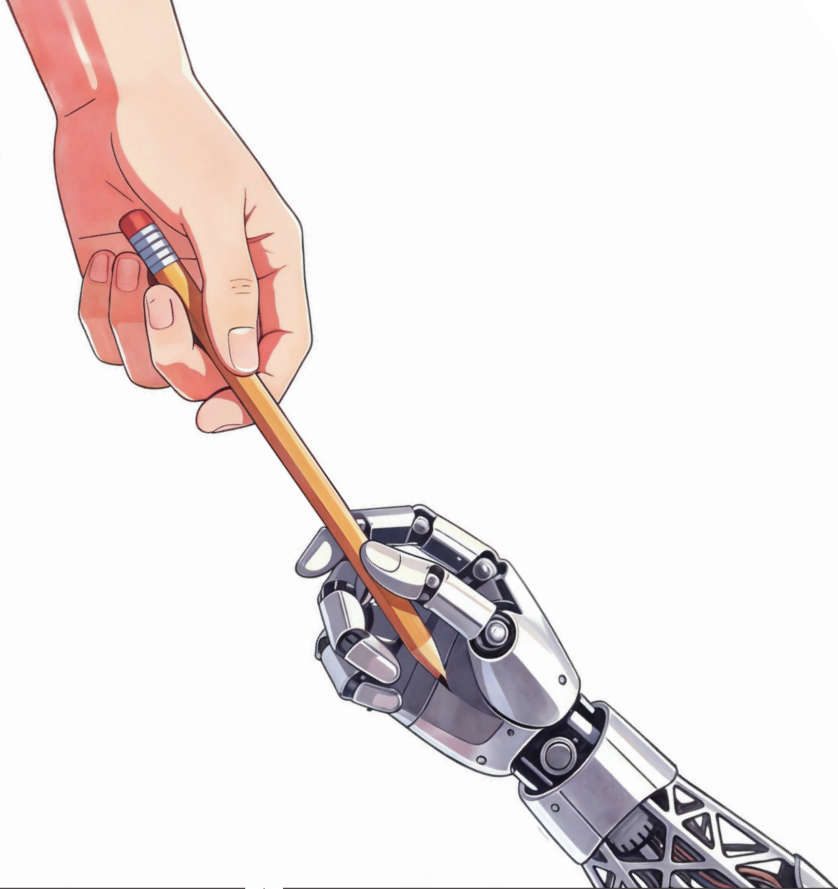
올해 목표는 매출 10배, 조직 규모 5배다. 지난해 문 의가 쏟아졌는데 인력 부족으로 놓친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문의가 이어져 올해 하반기에 현지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피지컬 시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은 엔비디아는 데이터 부족이라는 병목을 제조업 강국 한국의 스타트업과 함께 풀려고 한다. 엔닷라이트가 비집고 들어가려는 자리가 바로 그 빈틈이다. 10년을 참도 못 자며 기술을 버려온 부부는 이제야 제 시장을 만났다. 그 끈기가 한국 제조업을 타고 피지컬 시의 새로운 표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estima7@gmail.com

창작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올라 토카르추크(Olga Tokarczuk)가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다. 폴란드 포즈난의 한 행사에서 유료 인공지능 챗봇을 ‘자기야’라 부르며 “우리 이걸 아름답게 다듬어볼까?”라는 말을 건넸다고 창작 과정을 설명했다. 문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문학이라는 고귀한 작업에 언어 모델을 쓰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며 일각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올라 토카르추크는 공식 성명을 내고 “내 발언이 오해를 샀다”며 “오랜 세월 도서관을 뒤졌던 것처럼 자료 확인을 빨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구로 쓸 뿐”이라고 반박했다.

작가로서 기사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화를 낼 일인가 싶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박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밤늦게 혼자 글을 쓰던 작가가 인공지능을 맡뱌 삼는 게 그렇게 지탄받을 일인가?

스토리를 다루는 예술 작품 중에서 창작의 모든 과정을 혼자 도맡는 경우는 드물다. 연극이나 영화는 수많은 창작자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드라마나 웹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설은 작가 혼자 모든 걸 써야 한다. 캐릭터 만들기부터 배경 자료 조사, 구성, 집필, 팩트체크, 퇴고까지 혼자 책임진다. 출판사의 편집자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혼자만의 작업이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이 명확하다. 단점은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재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작가라고 해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단점은 곧 장점이 되기도 한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의 다양한 감정을 마음껏 탐험해 볼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치 보지 않고 끝까지 해볼 수 있다.

올라 토카르추크가 인공지능에 “자기야, 우리 이걸 아름답게

다듬어볼까?”라고 말을 건넨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말을 거는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걸었을 것이다. 올라 토카르추크는 모든 문장을 자신이 직접 썼다고 말했다. 포털에 검색하듯 인공지능에 검색을 맡기는 게 뭐가 문제일까? 나는 이 문제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다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여과 없이 복사해 자신의 문장으로 위장한다면 그건 독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야. 반면 작가적 사유를 더 날카롭게 버리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그건 타자기에서 워드프로세서로 넘어간 것과 같은 기술적 진화일 뿐이지. 결국 부도덕함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의 고통을 우회하려는 알팍한 태도에서 발생한다고 봐.”

인공지능이 내게 해준 말이다. 올라 토카르추크 같은 대가는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조급함, 글 쓰는 게 너무 힘들니까 복잡하고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편리한 길로 가려는 마음이 무심코 생겨날 것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이 글의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㉞



김중혁 소설가
『팽귤뉴스』,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작가
popsong7@gmail.com

시와 미래 ①

일자리의 지각변동

최근 글로벌 빅테크는 AI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아마존은 지난 1월까지 사무직 3만 명을,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은 최근 1년간 2만1천 명을 감원했다. 메타 역시 지난 5월에만 전체 직원의 10%인 8천 명을 해고한 데 이어 7천 명은 AI 조직에 재배치했는데, 기존 직원이 하던 코딩 등의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대신하도록 사내 업무 체계를 재조정 중이다. 심지어 직원 활동 추적프로그램(MCI)을 설치해 직원들의 마우스 움직임·클릭, 키보드 입력 정보 등을 기록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려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나라경제』 7~9월호 NOW에서는 AI가 우리 일과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 상황과 그 흐름이 가속화될 미래를 상상해 봤다. 그 첫 번째 기획으로 일자리의 재편을 다뤘다. AI가 가져온 국내외 일자리의 지각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인간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과 노동법의 변화, 미래 일자리시장을 조망했다.

시가 가장 먼저 빼앗을 일자리는 무엇일까?



오현우
 중앙일보 IT산업부 기자
 oh.hyeonwoo@joongang.co.kr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가 촉발한 ‘고용 없는 호황’이 본격화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힌턴 교수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까지 AI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AI의 업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지식 기반 직종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AI의 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자리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시가 가장 먼저 빼앗을 일자리는 무엇일까. 과거 증기기관을 통해 산업혁명이 이뤄질 때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디지털 혁신이 이뤄질 때는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실직했다.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시가 개발도 대신하고 의료 상담도 해줄 만큼 똑똑해져서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AI는 과거와 달리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터를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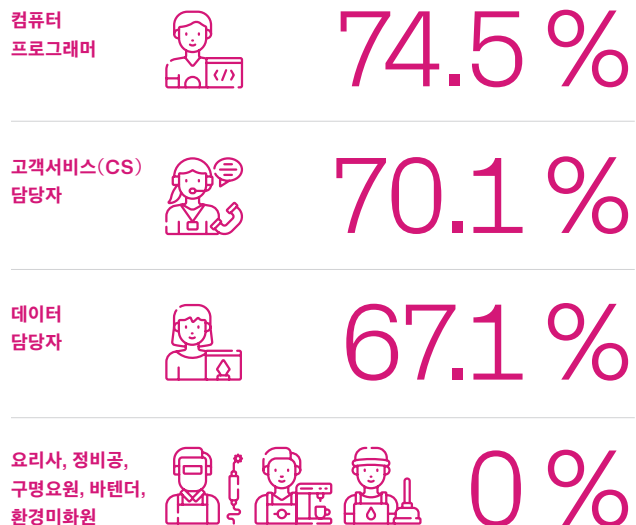
AI 위협 일자리 1순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성·백인·고학력·고소득 화이트칼라 일자리부터 잠식
 미국 AI 모델 개발사 앤스로픽은 지난 3월 「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Labor market impacts of AI: A new measure and early evidence)」 보고서를 통해 AI에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 1순위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가 인간을 대체할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 등을 각 직무에 사용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관측 노출도(observed exposure)’라는 신규 지표를 사용했다. 미국 내 800여 개 직종을 대상으로 업무를 시로 얼마나 자동화했는지를 계

산한 수치다. 값이 클수록 시가 해당 직종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도 커진다. 이전까지 일자리 관련 연구들이 시의 성능과 기능을 활용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측정했다면, 이번 연구는 실제 시로 대체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앤스로픽은 AI에 노출이 많이 된 직종을 ‘고노출 직종(노출도 상위 25%)’으로, 적은 직종은 ‘저노출(노출도 하위 10%) 직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노출도 74.5%로 가장 높았다. 고객센터(CS) 담당자(70.1%), 데이터 담당자(67.1%), 시장 분석가(64.8%), 재무 분석가(5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육체노동 비중이 큰 요리사, 정비공, 구멍요원, 바텐더, 환경미화원, 정원 관리자 등은 노출도 0%를 기록했다. 전체 직종 중 노출도가 0%인 직종 비중은 약 30%였다. AI에 많이 노출된 직종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24~2034년 직업별 고용변화 전망」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AI 노출도가 10%포인트씩 증가할 때마다 BLS가 예측한 해당 직업의 예상 고용 증가율은 0.6%포인트씩 감소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현상은 주로 저소득·저숙련 일자리 위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 시가 노리는 것은 고학력·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이다. 앤스로픽이 노출도 상위 25% 직종과 노출도 0% 직종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고노출 직종 평균 임금이 47%가량 높았다. 시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고소득 직종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일자리는 AI에 얼마나 노출됐을까?





지난 5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앤스로픽의 '코드 워드 클로드' 개발자 콘퍼런스 풍경. © 연합뉴스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도 AI의 위협 강도가 달랐다. 여성의 경우 고노출 직종에 속할 확률은 저노출 직종보다 약 16%포인트 높았고, 백인은 11%포인트, 아시아인은 2배 이상 높았다. 성별과 인종에 따라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엇갈려서 나타난 결과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도 컸다. 대학원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저노출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지만, 고노출 직종은 17.4%로 4배가량 컸다. 고학력 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AI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가 촉발한 '고용 없는 호황'이 본격화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AI의 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자리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 주장이다. 힌턴 교수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까지 AI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AI의 업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지식 기반 직종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AI·자동화에 따른 인력 효율화 내세워 대규모 감원... 한국은 지식노동 자동화 등으로 신규 채용 중단

다만 아직은 우려하는 만큼 시가 당장 일자리를 뺏지는 못하고 있다. AI에 가장 크게 노출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이론상으로 시가 개발 업무의 94%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지난해 클로드가 인간 개발자를 대체한 비중은 33%에 그쳤다. 보안 규제와 AI 모델 구동 환경, 최종 검수 절차 등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해외 대기업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 사무직 1만4천 명을 감원한 데 이어 지난

1월 1만6천 명 감원 계획을 추가로 내놨고, 메타는 2028년까지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기로 했다. HSBC홀딩스도 2만 명 규모 감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과 해고가 유연한 글로벌 기업은 인력 감원 이유로 AI·자동화에 따른 인력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 대기업들은 신입 채용도 줄이고 있다. 퇴직금, 규제 등 대량 해고에 수반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미국의 노출도 상위 25% 직종에선 22~25세 신규 취업자 수가 2년 전보다 14.3% 감소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5천 명 줄었다. 201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업종은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서비스, 법률·회계 등 고학력 전문직 비중이 높은 분야다.

업계에선 생성형 AI 확산으로 문서 작성과 코딩·회계 등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국도 2022~2024년에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15~29세 청년 고용 지표가 15% 줄어들었고 AI 도입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년 고용 증가율은 2023년 이후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실제 업무 현장에 투입돼 채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시가 주니어 직원 3명 뺏을 하다 보니 A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은 정리해고가 까다로운 탓에 감원 대신 신입 채용을 중단하며 고용이 위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탈속련을 경계하라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
dappled@hanyang.ac.kr

AI는 아직까지 생성은 잘하지만 자신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능력, 그 평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한참 부족하다. 이러한 능력은 상당 기간 사람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

요즘 부쩍 AI 시대 ‘살아남기’ 전략이 유행이다. AI 시대에도 절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나 직업을 문의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AI 붐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는 그렇게나 인기가 많던 국내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이 최근에는 취업난을 겪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대량 실업에 직면했다는 흥흥한 기사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살아남기 전략이 유행하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이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AI 변화에 ‘어떻게 하면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살아남기’ 담론의 근본적 오해...
인간-기술은 공진화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닌 사람
하지만 필자는 이런 ‘살아남기’ 담론 자체가 AI처럼 영향력이 막대한 범용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AI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AI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혁신적 기술과 인류의 상호작용 역사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오류다.

일단 당연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AI 기술 개발과 도입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당연히 적절한 감가상각 시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 증가 효과나 이윤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AI를 도입할 것이다. AI는 적어도 당분간은 (피지컬 AI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까지는)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는 일, 그중에서도 정형화된 학습 데이터가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디지털 업무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위협을 받는다. 반면 낮은 임금을 받고 물리적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인간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 투자수익률(ROI)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AI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술이 세상에 퍼지는 것이 아니다. 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득이 있는 영역으로만 퍼져 나간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겠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인 AI가 이해하기 어려운 실패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기업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서 AI 전환(AI)이 이뤄질 것이다. 결국 AI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AI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 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AI를 활용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번영하기’ 위한 역량은 무엇일까? 우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AI 기술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어떤 능력을 꼭 집어서 그것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인간-기술 공진화 관점에서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최근 AI 기술 개발의 방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하는 인공일반지능(AGI)이나 인간을 넘어서는 초지능(ASI)이 아니라, 특정 작업을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앤스로픽이 코딩을 비롯한 특정 업무 수행 능력에 집중하면서 오픈AI의 매출을 앞선 사례가 이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AI를 ‘잘’ 사용해서 자신이 담당할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은 기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잘’을 ‘많이’와 혼동하면 위험하다. 인간의 두뇌는 낭비를 싫어한다. 그래서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하던 일을 AI에게 위임하면 점차 그 전문성과 관련된 뇌 영역을 다른 데 사용한다. 결국 오랜 기간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 획득한 소중한 전문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탈속련(deskill)이라 하

는데, 자동화 기술의 활용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위험 요인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미처 획득하지 못한 초심자들에게 이 탈속현은 더 심각하다. 전문성을 획득할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를 '잘'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즉 특정 전문성에 필요한 핵심 역량(core capabilities)을 획득·유지하려는 노력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시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 압박에 시달릴 때는 당연히 시를 써야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발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핵심 역량을 갖추거나 더 향상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퇴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강화(augmentation)할 수 있도록 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통합적’ 시각으로 해결책 제시하는 메타 인지 능력, AI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적 유연성 등이 핵심 역량

이러한 업스킬의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통찰력과 평가 능력이다. 현재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시에게 ‘초별구이’급 작곡을 맡기고 이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을 골라 최종적으로 상품성 있는 작품으로 완성시키며 곡을 쓴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가 처음에 내놓는 ‘초별구이’의 품질이 고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은 조금만 손질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떤 것은 작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시의 ‘심미안’ 부족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이다. 즉 시는 아직까지 생성은 잘하지만 자신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능력, 그 평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한참 부족하다. 물론 이 부족함을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고급’ 학습 데이터는 획득하기 어렵거나 비싸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이유로 평가 능력, 평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상당 기간 사람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인간적으로 똑똑하지만 ‘상식’이 부족한 시와 함께 일하면서 번영하려면 여러 전문 분야에서 내려진 판단들 간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메타 인지 능력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당분간 법인격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낮은 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를 활용한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시를 활용한 결과물이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태도를 습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인간-AI 연합팀 내에서 잘 해내려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낮선’ 지능으로서의 시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도 도움이 된다.

AI 시대에 번영하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인류가 늘 그랬듯 우리는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지난 1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 수노(SUNO)의 한 직원이 다양한 악기의 오디오 파형이 출력된 화면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SI 시대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향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khyuk29@korea.ac.kr

200여 년 전 산업혁명은 온 세상을 바꿨다. 중세 영농 산업구조는 근대 공장제 산업구조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종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계층이 등장했다. 노동법은 바로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법·제도 체계다. 따지고 보면 노동법은 산업혁명의 산물로, 자본과 노동 사이 ‘쟁취와 착취’의 프레임을 전제로 설계됐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노동법의 구조적 속성과 체계는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현실과 규범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고, 이를 메우는 과정에서 요란하게 법적 분쟁을 거듭해 왔다.

피지컬 SI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 노동법제 체계는 실효성 갖기 어려워

이제 SI 시대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시장과 규범의 괴리를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SI로 대표되는 산업의 구조적 전환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했듯 SI 시대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보던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피지컬 SI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며 행동한다. 게다가 인간의 신체구조에 내재된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운동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지컬 SI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시간 또한 틀림없이 우리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이쯤 되면 이념적 도그마에 갇힌 전통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확립적 노동법제 체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미시적인 법 문구 개정만으로 전환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법원 판결에 의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200여 년 전에 그랬다. 공장 설비만 파괴하면 도제식 공방 생산방식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목도한 바 있다. 이제 노동과 노동법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첫째, 착취와 쟁취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3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수직다관절로봇이 박스를 분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관계를 규율의 틀로 삼았던 노동법은 피지컬 SI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노사가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에도 벅찬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피지컬 SI의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림없는 소리다. 피지컬 SI의 도입이 인간의 일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SI에 대한 새로운 노동법적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통적인 근로시간이나 임금 기반의 법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산업 안전 분야에 피지컬 SI가 가장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위험한 작업현장에 굳이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해도 정작 하늘 위 자동차길을 규율할 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피지컬 SI 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동법 체계 구축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고민스러운 대목도 있다. 인간과 피지컬 SI의 협업을 어떻게 이룰지다. 자칫 피지컬 SI와 인간의 경쟁구도



**AI에 대한 새로운 노동법적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통적인 근로시간이나
 임금 기반의 법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산업 안전 분야에 피지컬 AI가
 가장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위험한 작업현장에 굳이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평가하고 예측하도록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의 노동력을 위해 피지컬 AI 활용 규범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고용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용능력 보호에 집중하고
 새 일자리에 수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 역량 강화도 필수**

셋째, 고용능력(employability)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법제의 핵심 가치이자 토대는 고용관계 그 자체의 유지와 보호였다. 해고제한제도가 대표적인 규율의 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고용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라도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고용능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고용관계 그 자체를 무작정 보호하고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는 새로운 직업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기업으로서도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역할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참여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

학 전공을 생애 내내 써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AI 시대다. 독일은 국가 전략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 내내 수시로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공적 이력이자 경력으로 제도화해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에 수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바로 미래 일자리 전략이다.

돌이켜보면 노동시장의 극단적 분절과 차별, 초고령화, 중대산업재해,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노동시장의 해묵은 숙제요, 고질병이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로 재해석해 매번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다 어김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부나 전문가의 의지와 확신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노동 문제라는 것을 뼈아프게 각성하지만 시행착오는 어김없이 반복된다. 덕분에 노동시장 현실과 규범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격변의 시대다.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아예 판 자체를 바꿀 게 틀림없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맞다면 중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이다. AI 시대, 노동법제 체계의 개편도 그래야 한다. ㉞

시는 결코 문명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kleee@khu.ac.kr

AI가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민주화할 때 일자리 시장의 최상위권에는 휴먼 프리미엄(Human Premium)의 시대가 열린다. 누구나 AI 교사, AI 의사, AI 비서를 부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과 사람의 시간은 가장 희소한 지위 신호재(signaling goods)가 된다.

새로운 기술이 문명의 전면에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언제나 환희와 공포라는 이중적 감정에 휩싸였다. 1839년 사진술이 등장했을 때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는 “오늘부로 회화는 죽었다”고 선언했고, 독일의 일부 지식인들은 사진을 악마적 장난이라며 비난했다. 1906년 미국의 작곡가 존 필립 수자는 축음기가 녹음한 음악을 ‘통조림 음악’이라 비하하며 인간의 지성과 혼을 말살할 것이라 경고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왔을 때는 필경사들이 손글씨의 고귀함을 주장하며 신기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I는 일자리의 새로운 가치·수요를 폭발시키는 ‘마이더스의 손’... 통번역 분야에 AI 도입했더니 전문 번역가의 가치 오히려 뛰어
 과연 역사는 그들의 예언대로 흘러갔을까? 기술은 기존의 노동을 없애고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 냈다. AI 시대의 일자리 조망 역시 이처럼 거시적이고 반복적인 역사의 궤적 위에서 바라봐야 한다. AI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수요를 폭발시키는 ‘마이더스의 손’, 즉 AI 플러스 이코노미의 궁극적 엔진이다.

시는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인지적·물리적 노동 자원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인력을 투입해 얻는 결과물의 생산비용과 한계비용이 낮아지면, 시장은 그 인력 자원을 덜 쓰는 것이 아니



라 역설적으로 더 갈구하게 된다. 비용 하락이 그동안 비용 장벽에 가로막혀 억눌려 있던 잠재적 수요를 폭발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번역 분야에서 AI 번역기의 발전은 인간 번역가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협업 사례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번역 AI를 도입한 결과, 과거 하루 20여 건에 그쳤던 인간 번역가들의 영문 기사 처리량이 하루 5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번역비용이 낮아지자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뉴스 총량이 폭발했고, 이는 글로벌 검색 노출과 해외 독자 유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단순 번역 업무는 알고리즘이 가져갔을지라도 AI 모델을 감독하고, 데이터 코퍼스(Data Corpus, 자연어 처리와 언어 연구를 위해 특정 목적을 갖고 수집한 대규모 언어 데이터 집합체)를 정제하며, 외교·법률 등 고위험 영역에서 최종 책임과 맥락을 검수하는 고차원적 전문 번역가의 가치는 오히려 격상됐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고 포드가 T형 모델의 대량 조립라인을 도입해 자동차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자 정비공, 주유소 직원, 도로 건설 인부, 교통경찰, 자동차 보험 및 금융업 종사자 등 무수히 많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탄생했다. 뉴욕 YMCA는 마부들을 대상으로 운전 및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거쳐 간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운전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1980년대 디지털 음악 표준 프로토콜인 디지털 미디(MIDI)와 신디사이저가 등장했을 때 세션 연주자들의 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사운드 프로그래머, 신디사이저 오퍼레이터,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직이 탄생했다. 기술은 인간의 손기술을 요구하던 시대를 지나, 음향을 설계하는 능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일자리의 질을 고도화했다.

로봇 트레이너, AI 행위 감사관 등 새로운 일자리 등장하고 인간의 일은 실행과 노동에서 판단과 승인으로 격상될 것

최근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로봇 자율 실험실이 등장하고 있다.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실험 디자인만 업로드하면 기계가 스스로 피펫(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는 실험기구)을 움직여 시약을 섞고 병렬 실험을 수행한다. 이 환경에서 연구자는 반복적인 실험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성공의 기준을 설정하는 질문의 예술가이자 결과 승인자로 진화한다. 장정일의 시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 참(僦)이 조난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뜨거운 배를 갈라 온기를 내어주듯 AI는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브라이트 머신즈 같은 기업이 선보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은 소프트웨어 설정만으로 생산 공정을 순식간에 바꾼다. 대량 생산 체제에서 발생하던 과잉 재고와 공급 부족의 비동기성 고통이 실시간 온디맨드(On-Demand) 생산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제 제조산업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단순 조립공이 아니다. 분산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전문가, 로봇에게 작업을 가르치는 로봇 트레이너, AI 품질 관리자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 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AI가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민주화할 때 일자리 시장의 최상위권에는 휴먼 프리미엄(Human Premium)의 시대가 열린다. 누구나 AI 교사, AI 의사, AI 비서를 부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과 사람의 시간은 가장 희소한 지위 신호재(signaling goods)가 된다.

마치 유기능 식품이나 수공예품 인증처럼 100% 인간 창작

지난 5월 28일 서울 강동구 갤럭시 로봇파크에서 피지컬 AI 행사인 '마하33: 피지컬 AI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Human-made) 인증 마크를 감별하고 보증하는 새로운 신뢰 산업이 번창할 것이다. 부유층은 AI 로봇과의 편리한 대화 대신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진 진짜 인간 전문가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이다.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구매와 판매를 대행하며 기계 대 기계(A2A)의 미소거래(Micro-transaction)를 수백만 번 수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 보험 설계, 여행 알선 등 전통적인 정보 중개업은 축소되겠지만 에이전트 간의 담합을 감시하는 AI 행위 감사관, 에이전트 경험(AX) 디자이너, 에이전틱 상거래 최적화 전문가 등 규칙을 설계하고 신뢰를 관리하는 새로운 직업군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범용인공지능(GPAI; General Purpose AI)의 시대에도 시장경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일은 실행과 노동에서 판단과 승인으로 격상될 뿐이다. 물리적 실체도, 법적 책임 능력도 없는 AI는 결코 문명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바꿀 뿐 인간의 가치를 소멸시키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해 내 편으로 만드는 조기 적응력,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더 거대한 인류의 난제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문명의 설계자로서의 비전이 필요하다. 기술이 노동의 비용을 제로로 만들 때 오직 인간만이 가진 판단과 책임의 가치는 무한대로 증폭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AI 시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일자리의 진정한 미래다. 🤖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호우·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2026. 6. 1. ~ 8. 31.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iOS용 QR코드



안드로이드용 QR코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전국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는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백형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vanpelt9@korea.kr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높아졌고, 37주 미만 조산아(미숙아) 출생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비중 또한 2014년 3.5%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다. 더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 현장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부인과와 신생아 진료 분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필수의료과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 및 조산아·다태아 출생 비중 10년간 꾸준히 증가... 이송·전원 체계 정비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 전국 확대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모자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모자의로 전달체계를 재편해 전국 단위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지원 및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자의로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9개 권역(12개의 협력체계)에서 권역모자의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다만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는 협력체계가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 지역에 연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모자의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하고, 고위험 분만과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 선정 절차도 개선된다.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임산부가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모자의로 전원전담팀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적정 병원을 선정한다. 또한 병원 간 전원 과정에서도 119 구급차가 이송을 지원하고,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군헬기를 활용한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전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자의로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늘리고, 새롭게 구축된 모자의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모자의료센터의 인력규제를 완화해 근무형태를 더욱 유연하게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센터 당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파트타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임신 주수와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한 추가 수가 가산을 도입해 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둘째, 모자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전국 단위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 어디서나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한다. 특히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서 가능한데, 현재 서울에만 2개소가 지정돼 있어 전국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개소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신생아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인 중등증 이하 고위험 신생아의 수용력 향상을 위한 모자 전문병원 또한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진료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센터를 상향하고, 역량이 미흡한 기관은 센터 하향 또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모자 의료센터 재편을 추진한다. 중증-권역-지역센터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원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비수도권 권역센터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국립대 병원의 산과 등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한다. 산과 및 신생아과 전임의 양성과 진료 지원인력 등 인력기준을 보완해 지역 분만기관의 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역할 및 의무 수행 정도를 고려한 성과 기반 사후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국가 보상 강화해 산모 중증장애도 지원**

셋째,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의학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강화하고, 보상 대상도 확대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분만과 응급의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국으로 조기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여건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대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연합뉴스

황실을 중심으로 이송과 전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심근경색과 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수용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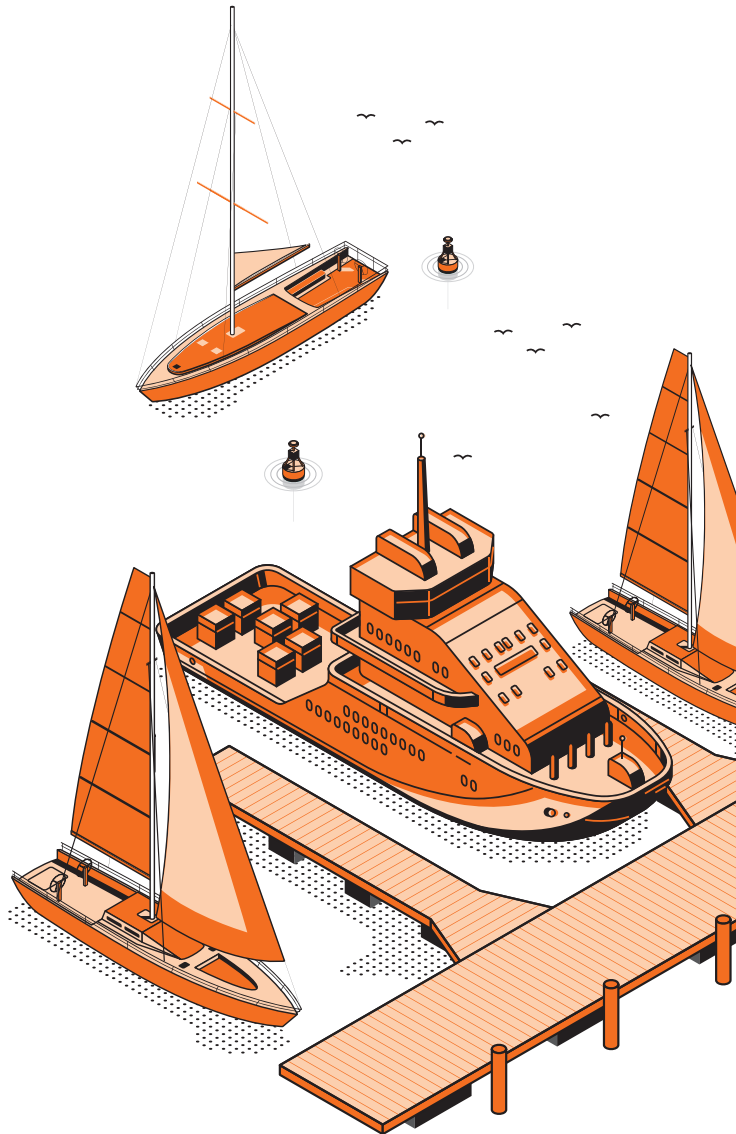
이번 대책의 의의는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그리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해 전국의 임신부와 신생아 및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역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더욱 촘촘한 모자의료·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절반으로 줄일 것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gem@korea.kr



부산해경은 지난 6월 16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 전용부두 해상에서 크루즈선 충돌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상황을 가정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시행했다. © 연합뉴스

“거친 바다가 유능한 선원을 만든다”는 옛말이 있다. 도전과 극복을 강조하는 격언이지만, 안전의 언어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현실에서는 바다가 거칠 땐 애당초 출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극복보다 예방에, 도전보다 신중함에 가까운 가치가 안전이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위험을 이겨내는 것보다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살피고 준비하는 것, 그러한 태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해양안전문화다.

오늘날 바다는 산업 종사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여행객, 레저보트를 띄우는 가족들, 새벽부터 먼바다로 나가는 낚시 동호인들까지. 바다를 이용하는 인구는 연간 4천만 명을 넘어섰다. 주말이면 연안 항구마다 여객선 승객들로 북적이고, 마리나에는 레저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바다가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다가올수록 안전은 특별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일상의 감각이 돼야 한다. 해양안전문화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경제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찾는 모든 국민의 과제가 됐다.

감시 장치 없는 바다에서는 스스로가 CCTV 돼야... '해양 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 자발적 참여 유도

사람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우리 정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CCTV 앞에서 행동을 조심한다. 도시 골목의, 무인 상점의, 도로 위의 감시 수단은 가슴 속 질주 본능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망망대



해는 그러한 감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이다. 바다 위에서는 감시가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감시 수단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

선원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감시 없이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전통이 있다. SOS 신호를 받으면 비록 전쟁 중인 상대국 선박이라도 구조에 나섰다. 바닷길을 개척했던 선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뱃길의 특징을 항해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남겼다. 남겨진 기록은 훗날 그 항로를 따라나선 동료 항해자의 안전을 위해 쓰였다. 이러한 인류애적인 행동은 누군가의 감시가 아닌 바다 사람들 스스로가 오랜 세월 쌓아온 전통이다.

그러나 해도와 항법 장치가 정교해지고 안전설비가 선박을 채우면서 바다는 점점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자연 앞에 겸손했던 선원들의 긴장감이 과학기술이 주는 안도감에 자리를 내줬다. 기술이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과신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전통을 서서히 퇴색시키고 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주요 사고의 80% 이상이 안전수칙 무시와 같은 위험한 행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범을 덧씌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방식으로 다시 깨우는 것이다.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4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 제도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홍보와 실천활동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맞춤형 지원과 교육이다. 안전문화는 결국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어업인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 특히 연근해 어선에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언어 장벽 없이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현장 프로그램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처음 바다를 접하는 아이에게는 놀이처럼, 바다를 일터로 삼아온 어업인에게는 현장의 소통방식으로, 주말마다 레저보트에 오르는 시민에게는 실용적인 체험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둘째, 제도와 인프라 정비다. 과거 항해일지에 남았던 기록이 선원 개인의 선의로만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공동체의 합의와 관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 안전은 현장 종사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조직과 경영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고가 증명해 왔다. 이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제도와 선사 안전 등급제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종사자 피로·위험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해양안전 체험 인프라도 꾸준히 늘려 나갈 예정이다.

선사 안전 등급제, 종사자 피로·위험 신고 시스템 도입하고 지역축제·레저활동과 연계한 체험형 캠페인으로 안전문화 확산

셋째, 홍보와 실천 다각화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양식으로 일상의 언어와 관습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안전수칙이 딱딱한 규범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지역축제·레저활동과 연계한 체험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흥겨운 축제 현장에서 구명설비 작동 요령을 놀이처럼 익히고 레저 동호회에서 해양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안전은 낯선 의무에서 익숙한 습관이 된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연령대별·활동형태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혁신방안이 지향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동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바다의 빛나는 유산을 현대적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방안에 담긴 과제를 통해 바다 앞에 겸손했던 우리의 전통을 이어나가려 한다.

형식적 규제와 매뉴얼에 기댄 사회와 조직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기 쉽다. 규정과 매뉴얼이 담아내지 못한 예상 밖의 상황은 구성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러한 결과는 타율적 안전관리의 명확한 한계다. 반대로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회에서는 잘 짜인 어떤 규정보다도 강력한 안전망이 작동한다. 안전문화는 타율적 규제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안이자 생명 존중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산업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 "거친 바다가 유능한 선원을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더 유능한 선원은 거친 바다에 나서지 않을 때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국민은 바다로 나갈 때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수칙을 살핀다. 국민과 정부,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속에서 감시가 아닌 신뢰와 공동체 의식으로 지켜나가는 바다가 완성될 것이다. 🌊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10개 창업도시 전국에 만든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장

macnam@korea.kr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 자본,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작업이다. 창업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지역 창업생태계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로 ‘창업-성장-정착’의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하면 지역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 성장을 이룰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인 스타트업블링크는 세계 100개국 1,556개 도시의 스타트업 수와 창업 인프라를 측정하는 ‘수랑 지수’, 유니콘 기업 수와 투자 유치 규모를 보는 ‘품질지수’,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을 평가하는 ‘비즈니스 환경지수’를 종합 분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지수(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순위를 보면 국가로는 미국이, 도시로는 실리콘밸리가 단연 독보적인 1위다. 미국은 창업도시 100위권 내에 무려 32개 도시를 진입시키며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 역시 19위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 3년간 20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한 단계 올라섰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18위를 기록했다.

한일 양국에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다. 100위권 내에 진입한 창업도시가 각각 서울과 도쿄, 단 1곳뿐이라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저출생, 저성장, 지방소멸이라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압축 성장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스타트업블링크의 엘리 데이비드 로가 대표는 국내 언론사 기고를 통해 “서울의 창업 활동은 한국 내 다른 도시 평균의 50배에 달한다”며, “이 격차를 10분의 1로만 줄여도 균형 잡힌 다핵 구조가 형성돼 국가 전체의 회복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한국 창업 생태계의 취약점을 진단한 바 있다.

국내 다른 도시보다 창업 활동 50배 많은 서울… 지역에 ‘창업-성장-정착’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핵심

국내 지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도드라진다. 창업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20위이지만 대전 296위, 부산 328위, 울산 391위, 대구 419위로 격차가 크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액셀러레이터(AC)의 67.4%, 벤처캐피털(VC)의 90.0%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등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해당 지역 정착률은 87.5%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35.7%에 불과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창업 영역에서도 굳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 자원의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 거점의 다핵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업하고 성장함으로써 지역이 자생력을 갖춘 독자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돕는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다.

글로벌 창업도시의 선도 모델인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이 우수한 기술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하고,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AC와 VC가 풍부하다. 국적과 인종,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세계 우수 인재를 흡수하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킹이 일상화돼 있다. 독일 뮌헨 역시 뮌헨 공과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 인력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뛰어난 정주 여건이 창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이들 글로벌 창업도시의 공통점은 인재, 자본, 기술이라는 창업 자원이 상시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창업 활동과 혁신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서울 역시 글로벌 창업도시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스타트업 생



지난해 9월 26일 전북 익산시 하림 퍼스토키친에서 열린 '그레이트 익산 청년창업 페스타' 현장. © 연합뉴스

태계가 구축된 곳이 오직 수도권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지수 100위권 내에 대한민국 도시 5개를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포진한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대전, 대구, 광주, 울산)를 선도 모델로 우선 지정했다. 향후 6곳을 추가 지정해 전국에 총 10개의 명품 창업도시를 조성할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창업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지방 도시들은 지역 특화 성장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의 창업을 돕거나 다른 지역 창업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도해 대학, 연구기관, 시험기관, 창업지원기관 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이끈다. 창업과 연구개발(R&D), 실증, 투자, 판로 등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해 '창업-성장-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5대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창업의 씨앗인 기술 인재가 지역에 끊임없이 유입되도록 지원한다.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지정해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현재 카이스트에만 설립된 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생과 교원에 대한 창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통해 우수 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도시 유입을 촉진할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도전하는 창업자에게 스케일업(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전용 R&D와 팁스(TIPS)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신기술 규제 해소를 위해 창업도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하며 신산업 관련 규제 특례를 대폭 확충한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역량이 검증된 스타트업에는 단계별 메뉴판식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폭적으로 돕는다.

셋째,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대 과기원 소재 창업도시를

포함한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2030년까지 모펀드 기준 2조 원(자펀드 기준 3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허브와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 등 지방의 투자 인프라도 함께 확장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통합 거버넌스 구축하고 창업정보와 정주 여건 포함한 '창업 종합 포털' 제공

넷째, 로컬 창업과 연계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균형적 확장을 도모한다. '강한 소상공인', '로컬 브랜드' 등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의 골목상권 및 글로컬(Glocal) 상권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방 소재 로컬 창업지원 비중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돕는다.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창업지원 기관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집행하도록 지원한다. 창업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한 도시별 '창업 종합 포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 자본,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작업이다. 창업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지역 창업생태계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 가도에 오르면,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상경하지 않고도 고향에서 마음껏 창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창업-성장-정착'의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하면 지역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 성장을 이룰 것이다.

글로벌 선진 도시들의 사례가 증명하듯 창업도시 성공의 열쇠는 지역의 창업 자원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시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지정된 4개 창업도시 지역 특성에 맞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창업도시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다. 추진단의 어깨에 지역의 미래와 국가 균형 발전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기대해 본다. ☞

둘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의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자산·유가증권 또는 상품·용역에 대해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거래 내용과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장은 중요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거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셋째,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상장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다. 합병, 영업양수도(business transfer), 대규모 자산 취득·처분, 주요 주주 변동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중요사항 발생 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보의 적시성도 한층 강화됐다.

이들 제도의 공통된 목적은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업집단 내부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의사결정과 거래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평가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집단 스스로도 더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 2분기에 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편…
계열사 간 거래 조건 정보 함께 공개하고 리스 거래 공시도 강화**

올 2분기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개편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좀 더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공시다. 그동안에는 거래금액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면 올해 연 공시부터는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담보 제공 여부, 채무보증 유무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같은 1천억 원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율과 만기, 담보 여부에 따라 경제적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시장이 거래의 실질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개선했다.

리스 거래에 대한 공시도 강화됐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리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계열회사 간 리스 거래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는 전용 양식을 신설해 거래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자산 거래 공시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금이나 유가증권 거래에 비해 기타자산 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투자자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비유동자산 거래 내역까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의 실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 상대방별 총액만 공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건별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해 정보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의 충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했다. 연 공시 항목임에도 분기별 구분 작성성이 필요했던 일부 양식을 정비해 불필요한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종종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시제도의 본질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시장경제는 정보 위에서 작동한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될 때 시장의 감시 기능이 살아나고 기업의 책임경영도 강화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100개를 넘어선 지금,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시장의 정보 수요를 반영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촉진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연합뉴스



OECD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루지는 정책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개방시장과 공정경쟁 원칙 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산업정책

산업정책은 개방시장, 규범 기반 무역질서, 공정경쟁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OECD는 협상 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보조금과 산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비례성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통상규범의 장과 정책분석의 장이 서로 보완될 때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산업정책이 다시 국제경제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한 때 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조심스럽게 다루졌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 기술경쟁,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국 정부는 산업의 방향과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결정도 이제 비용과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공급망,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예측 가능한 규범 환경이 경쟁력의 중요한 조건이 됐다. 문제는 산업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산업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원칙 아래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난 6월 3~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MCM)'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다뤘다. 올해 회의 주제는 '개방시장,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이며 의장국은 핀란드, 부의장국은 한국과 뉴질랜드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부의장국으로 참여했다.

6월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산업정책 다뤄… 산업정책, 특정 산업 지원 넘어 종합정책 의제로 확장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위험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정책은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녹색·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OECD 각료이사회'의 '세션 1-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 회의'에 회원국 및 기립 후보국, 핵심협력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모습. © 산업통상부

러나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시장 왜곡, 통상마찰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산업정책이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려면 개방시장과 공정경쟁이라는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의장성명에도 반영됐다. 의장성명은 산업정책이 시장 및 무역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표적화되며 비례적인 방식으로 설계·이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OECD가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엄밀한 분석, 표준 및 동료학습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부정적 외부효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가 OECD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OECD는 통상규범을 협상하는 기구라기보다 회원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데이터와 분석, 표준화와 동료학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장에 가깝다. 산업정책처럼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회의에서는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제조업 보조금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쟁과 규제, 재정 책임, AI와 양자 기술, 인적자본, 녹색 전환,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까지 폭 넓게 다뤄졌다. 이번 OECD MCM의 의제 구성은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 지원을 넘어 경제안보와 성장전략, 기술 전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종합정책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흥기술, 포용적 성장으로 연계 가능한가에 성패 달려... 공급망 안정과 녹색 전환은 산업정책의 시험대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디지털·신흥 기술이었다. AI와 양자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산업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이 곧바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고, 노동자가 이를 활용하며, 교육·훈련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기술 발전이 일부 기업과 고숙련 인력에만 혜택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인적자본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MCM은 '양자기술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주요 성과물로 제시했다. 양자기술은 정보의 수집·처리·전송 방식을 확장하며, 보건·의료, 금융, 통신·디지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기술로 평가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책임 있는 개발·활용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적 정책 기준도 중요해진다. 이번 OECD 권고는 이런 논의에 대한 공동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분야에서도 OECD는 책임 있는 AI 실사 지침, AI 정책 톨킷, AI 역량과 직업 간 연계 분석 등 다양한 산출물을 제시했다. 이는 기술 확산과 함께 거버넌스, 신뢰, 노동시장 대응을 중시하는 OECD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

한국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높은 대외의존도, 급속한 기술 전환, 인구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산업정책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책 효과를 지속하려면 시장 역동성과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함께 지켜야 한다.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정책보다 기업이 혁신하고 노동자가 전환에 적응하며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 산업정책의 성패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기업과 노동자의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적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OECD MCM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는 '개방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이다. 산업정책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폐쇄적 경쟁으로 흐르면 세계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보조금은 녹색·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시장 왜곡과 통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은 별개로 설계될 수 없다. 산업정책은 개방시장, 규범 기반 무역질서, 공정경쟁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OECD는 WTO를 대체하는 협상 기구는 아니지만, 회원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보조금과 산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비례성에 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 통상규범의 장과 정책분석의 장이 서로 보완될 때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공급망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됐다. 핵심광물,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은 각국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 다만 공급망 안정은 자국 내 생산 확대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다변화, 투명성, 책임 있는 기업활동,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함께 필요하다. 의장성명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함께 OECD 수출신용협약, 즉 공격수출신용 관련 국제규범의 현대화가 언급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녹색 전환 역시 산업정책의 중요한 시험대다. 녹색

전환은 장기적으로 청정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과 설비투자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기반 인센티브와 정책수단을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산업정책은 녹색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가입 30년 맞은 한국, OECD 정책 배우는 회원국에서 정책 경험 공유하고 논의에 기여하는 국가로


이번 회의는 한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30년 동안 OECD의 규범과 정책 경험을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해 왔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OECD 논의에 기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장면이다.

우리 대표단은 OECD MCM 주요 세션에서 주재와 발언 역할을 맡아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제조 AI 전환(M.AX), 에너지 전환, 규제 개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응, 녹색 전환 지원 등은 모두 한국이 실제로 추진 중인 정책 과제이자 OECD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하는 산업정책의 공통 의제였다. 부대행사도 중요한 계기였다. 한국은 OECD 가입후보국을 초청한 행사를 개최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발전 경험과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부대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신기술 분야 국제협력 논의에도 참여했다. 이는 한국이 OECD의 정책을 배우는 회원국에서 나아가,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연결

하는 정책협력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높은 대외의존도, 급속한 기술 전환, 인구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산업정책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책 효과를 지속하려면 시장 역동성과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함께 지켜야 한다.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정책보다 기업이 혁신하고 노동자가 전환에 적응하며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OECD MCM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산업정책은 더 이상 예외적 정책수단이 아니다. 좋은 산업정책은 폐쇄적 경쟁이 아니라 개방시장과 공정경쟁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시장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혁신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인프라, 인적자본과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데 있다.

한국이 OECD 가입 30년을 맞아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여기에 있다. 개방을 통해 성장하고 제도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 온 경험은 오늘의 산업정책 논의에서도 유효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시장과 공정경쟁, 혁신과 포용,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산업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종진
주OECD대표부 참사관
yoylee08@mofa.go.kr

지난 6월 16일 부산항 신석대-김만 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월 10일 프랑스 북부 당케르크에 위치한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의 전기로 제강 생산 전용 시설. © 연합뉴스

다자무역의 ‘안전밸브’였던 GATT 제28조, ‘깨진 유리창’ 될까?

이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GATT 제21조 안보예외, 환경을 내세운 제20조 일반예외 등 본래 좁게 열려 있어야 할 예외의 문들이 저마다 자국 산업정책의 통로로 동원되고 있다. 여기에 항구적 관세 인상이라는 제28조 카드마저 적극적으로 합류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떠받쳐 온 다자무역체계는 빠르게 헐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WTO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를 꼽으라면 단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다. EU와 영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자국 철강제품의 WTO 양허를 조정하겠다고 제28조 협상에 나섰다. GATT 제28조는 한 번 약속한 관세를 일정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고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유연성 조항인데, 그간 통상 무대에서 조명받지 못하던 이 장치가 철강을 매개로 무대 한복판에 올라섰다.

유연성 조항인 GATT 28조, 철강 공급과잉으로 주목… 다자협력 시도 깨지며 미·캐나다 등 각국 빗장 거는 중
흔히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은 전 산업의 토대인 까닭에 늘 통상 마찰의 중심에 있었고, 그 부침은 곧 다자무역체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까닭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공급과잉이라는 전 지구적 병증과 각국의 보호주의, 그리고 다자질서의 작동 원리가 한꺼번에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철강 잉여설비는 약 6억4천만 톤으로, OECD 회원국 전체 생산량(약 4억2,600만 톤)을 2억 톤 이상 웃돈다. 세계 수요가 4년 연속 줄어드는 동안에도 생산능력은 7년째 늘어 24억 톤을 넘어섰다. 그 원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층적이다. 보조금, 저리 용자, 국유기업 우대 같은 비시장적 개입을 핵심 요인으로 짚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외에도 전 지구적인 수요의 구조적 둔화, 에너지정책 변화,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여겨 의도적인 증설에 나선 신흥국들의 행보, 그리고 부실 설비의 폐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등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무엇이 소

위 '시장 왜곡적' 보조인가를 두고도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SCM) 개혁, 초국경 보조금 등 통상규범 논의가 분분하다.

원인을 둘러싼 진단은 여러 가지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백하다. 진작 문 닫아야 했을 부실 설비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밀려 나온 막대한 잉여 물량이 혈값으로 국경을 넘어 글로벌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아시아 열연강판 가격은 한때 톤당 500달러 안팎까지 떨어져 5년 만에 최저치를 맴돌았다. 우리 업계 역시 수입재 침투율이 30%대로 치솟았고, 주요 철강사의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에서 2~3%대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수익성이 무너지면 탈탄소 전환 여력도 줄어들기 마련이어서 전 세계 저탄소 철강 프로젝트의 약 5분의 1이 보류됐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보호주의가 아니라 다자적 협력으로 풀려는 시도가 있었다. 2016년 G20 항저우 합의로 출범한 OECD 주관의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포럼(GFSEC)'은 전 세계 철강 생산능력의 90%가량을 아우르며 잉여 설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발을 빼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따르면서 동력은 식었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이 각국의 일방적 빗장이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철강 관세를 최고 50%까지 올렸고, 캐나다는 FTA 체결국에까지 관세할당(TRQ)을 넓혔으며, 인도는 25%의 세이프가드를 부과했다. 멕시코 역시 비FTA국 철강 품목에 최고 35%의 관세를 영구화하는 등 도미노식 장벽을 쌓아 올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 섞인 시선을 받는 것이 바로 EU와 영국의 최근 행보다.

세이프가드 종료 다가오자 제28조 꺼내 든 EU·영국… 보호하려던 산업 넘어 폭넓은 영향 미치는 보호무역

EU와 영국 모두 철강 보호조치의 출발점은 세이프가드였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산업에 한시적으로 숨 쉴 틈을 주는 비상 처방이다. WTO 규정상 그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되며 보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일몰 처방이 제도의 약속이다.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기한이 도래하면 보호를 거둬 시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확립된 글로벌 규범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2018년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던 EU는 올해 7월이 되기 전에 이 조치를 졸업해야 했다.

그러나 EU가 택한 길은 졸업이 아니었다.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자국 산업에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GATT 제28조를 들고 나왔다. EU는 무관세 쿼터를 약 47% 줄이고 초과분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WTO에 양허 변경 협상 의사를 통보했고, 곧이어 영국 역시 철강 품목 전반의 포괄적 관세 인상을 위해 제28조 협상에 가세했다. 한시적이어서야 할 비상 처

미국, 관세 조치로
철강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

↗ 1,000 여 개

철강 사용하는
전방 제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

↘ 7만 5천 여 개

지켜낸 일자리 하나당
치른 사회적 비용

약 65만 달러

방이 만료 시점에 GATT 제28조로 항구적 장벽을 세우면서 비상조치의 항구화 시도라는 지적이 많다.

EU와 영국이 규범 합치를 주장하며 근거로 든 GATT 제28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존 양허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전반적인 양허 수준을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는 재협상 절차다. 다자무역체제의 주춧돌이 관세 양허(제2조)라면, 제28조는 무역 개방의 결과로 국내 정치적·경제적 압력이 심각할 때 그 충격을 제도의 틀 안에서 분출하도록 돕고, 다자무역 질서로부터의 극단적인 이탈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밸브'인 셈이다. 그렇기에 이를 통한 양허 수정은 극히 예외적인 기술적 조정이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민감 품목 보호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제28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보상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수정국이 자국의 양허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경우 상대국은 동등한 수준의 보복관세로 맞설 수 있는데, 그 보복의 효과는 WTO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분쟁과 무관한 회원국에도 무차별적으로 미칠 수 있다. 1962년 유럽의 냉동닭 관세 인상에 미국이 소형 트럭 보복관세로 맞선, 이른바 '치킨 전쟁'이 그 단적인 예다. 미국의 트럭 관세는 분쟁 상대였던 유럽뿐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던 한국과 일본 등 여타 회원국에 적용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이는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올린 보호무역의 빗장을 거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려준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제28조 협상은 겨우 58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회원국들이 이 조항을 남용했을 때 발생할 다자무역 질서의 혼란을 고려해 그간 이 카드를 꺼내 드는 데 신중을 기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규정이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관세 장벽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목도해 왔다. 2018년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당혹감



지난해 3월 20일 스테판 제주르네 EU 무역·산업전략 집행위원이 독일 뒤스부르크의 티센크루프 제철소를 방문, 전담 발표한 'EU 철강 및 금속산업 행동계획(A 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을 안겨줬다. 관세 덕에 철강 생산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겨우 1천여 개에 불과했던 반면,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방 제조업에서는 무려 7만5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던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당시 제232조 조치로 지켜낸 일자리 하나당 약 65만 달러의 흑독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졌다고 추산했다. 과거 대공황을 심화하고 세계 무역을 60% 이상 무너뜨린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비극이 보여주듯 보호무역의 빚장은 언제나 보호하려던 산업보다 더 넓은 경제 생태계와 소비자에게 흑독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곤 했다.

**글로벌 각국이 도미노식 장벽 쌓을 우려 커져…
한국, WTO에 집단적 자제 호소문 제출해 지지 받아**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무역의 중추 역할을 해온 거대 경제권의 이러한 선택이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심화하는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무역규범을 선도해 온 이들이 GATT 제28조를 도구화하기 시작하면, 시장 잠재력이 크고 보호주의 유인이 강한 신흥국과 개도국 역시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도미노식 장벽을 쌓아 올릴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GATT 제21조 안보예외, 환경을 내세운 제20조 일반예외 등 본래 좁게 열려 있어야 할 예외의 문들이 저마다 자국 산업정책의 통로로 동원되고 있다. 여기에 항구적 관세 인상이라는 제28조 카드마저 적극적으로 합류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떠받쳐 온 다자무역체제는 빠르게 헐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은 지난 5월 초 WTO

일반이사회에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정신의 보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고 집단적 자제를 호소했다. 구조적 공급과잉이라는 난제를 일방적인 관세 장벽으로 해결하려 드는 흐름은 결국 보복의 악순환을 낳고 규범 기반의 체제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경고였다. 관세가 아닌 근본 원인 해소와 투명성 제고에 무게를 두자는 한국의 제안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한 수많은 회원국의 지지가 이어졌다. 거대 경제권의 이번 시험이 다자체제에 드리울 그늘을 국제사회가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자무대의 의미 있는 이정표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다자무역체제의 설계자로 알려진 코델 헐(Cordell Hull)은 일찍이 교역의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간 상거래를 넓혀 간다면 전쟁마저 줄일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역을 단순한 경제적 거래 행위가 아니라 평화와 신뢰를 쌓는 길로 본 것이다. 개방으로 신뢰를 닦으려던 그의 통찰처럼 제28조라는 새로운 도전 역시 회원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풀릴 것이다. 당장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다자적 지혜를 모으는 이 실천이야말로 앞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일 것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연대의 힘을 발휘해 온 다자체제의 지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김**



허정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jshur24@mofa.go.kr

인도의 '계산된' 개방...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에서 지속 성과 거두려면?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자유화와 보호주의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인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과감한 시장 개방에 나섰지만 개방 경험이 곧 전면적인 자유무역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난 30여 년 동안 인도의 통상정책은 개방과 보호를 끊임없이 조정하며 자국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최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확대하면서도 관세, 품질 규제, 산업보조금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외환위기 계기로 시장개방 등 경제개혁 실시했으나 농업 분야는 보호정책 유지하는 등 경제안보도 중시

인도의 통상정책은 1947년 독립 이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수입대체 산업화로 시작된다. 당시 인도는 외환 부족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강력한 수입 규제체계를 구축했다. 고율 관세, 수입 라이선스 제도, 외환 통제, 공공 부문 우선 정책 등이 결합된 체제에서 인도경제는 사실상 폐쇄경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됐다. 1990년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약 125%, 최고 관세율은 355%에 달했으며 제조업 대부분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보호받았다.

1991년 외환위기는 인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걸프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이 수입 2~3주분 수준까지 감소하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과 함께 전면적인 경제자유화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대폭 인하됐고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도 본격화됐다. 인도의 최고 관세율은 1991년 355%에서 2007년 1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무역 규모 역시 GDP 대비 20% 미만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시기 인도는 WTO 체제에도 적극 참여했다. 1995년 WTO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시장 개방을 확대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정책을 유지했다. 제조업 관세는 빠르게 인하된 반면 농업 평균 관세는 30% 안팎을 유지했고, 유제품·곡물·설탕 등 민



감 품목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었다. 이는 인도가 개방과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후 인도는 싱가포르, 아세안(ASEAN), 한국, 일본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며 아시아 공급망에 편입됐고, FTA를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인도 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했고 양국의 공급망 연계도 강화됐다.

그러나 인도의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무역적자로 인해 인도 내 FTA 회의론도 존재했다. 특히 인도·아세안 FTA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제조업계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도 측에서는 한국과의 CEPA에 대해서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제기했지만, 최근 개선 협상에서 공급망 협력과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의제가 논의되며 전략적 경제협력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FTA 효과에 대한 일부 회의론이 제기되며 인도의 통상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는 인도의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탈퇴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 출범



지난 1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EU FTA 타결이 발표된 뒤, 우리총리 판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포옹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을 눈앞에 두고 최종 협상 단계에서 참여를 포기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 가능성, 농업·유제품 시장 개방 부담, 서비스 분야에서의 실익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는 인도가 단순한 시장 개방보다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관세 인하 중심 아닌 공급망 안보형 FTA 추진... 우리 기업, 공급망·산업협력의 핵심 파트너 돼야

RCEP 탈퇴 이후 인도의 통상정책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배터리, 전자, 자동차,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와 필수 인증 등을 활용해 수입 경쟁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도가 보호정책을 강화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는 아랍에미리트(UAE), 호주와 무역 협정을 맺은 데 이어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노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도가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기술협력, 현지생산 전략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이 만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영국과는 FTA를 체결했고, 올해 초 EU와도 FTA 타결 후 양국 간 비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최근 인도가 추진하는 FTA는 단순한 시장 개방보다 공급망 안정과 투자 유치,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 조항에도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UAE·인도 CEPA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과 직접 운송 요건을 포함해 제3국 경유 수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다.

결국 오늘날 인도의 통상정책은 무조건적인 자유화도, 전면적인 보호주의도 아니다. 인도는 개방의 혜택과 부작용을 모두 경험한 뒤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산업과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선택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선별적 개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시장 개방형 FTA에서 공급망 안보형 FTA로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서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가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기술협력, 현지생산 전략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인도시장 공략의 핵심이 관세 인화와 시장 접근성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통상정책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인도는 더 이상 단순히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다. 개방과 보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수출 파트너를 넘어 공급망과 산업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한중원
 KOTRA 인도 뉴델리무역관 과장
 jw_han@kotra.or.kr

6G 분야 표준화 주도하는 한·영 KSP, 글로벌 현안 대응하는 지식협력 플랫폼으로 확장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도국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해 왔다. 최근엔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KSP의 역할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이 재정 지원과 경험 공유 중심이었다면, 이제 정책·기술·지식 협력이 결합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AI,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통신 인프라와 같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고 관련 제도와 규범이 아직 형성 중인 분야의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국가 간 정책공조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지식협력 방향을 구축해 왔다.

2024년 기획재정부는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식협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과 표준 논의를 주도해 온 영국이 반도체, 네트워크, AI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분야에서의 지식협력을 제안했다. 양국은 관련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KSP로 CET 분야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협력과 국제표준화 논의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CET 분야 공동연구 거쳐 6G 표준협력 로드맵 수립... 한·영, 국제표준화기구 3GPP에 공동 기고서 제출

양국의 협력 논의는 2024~2025년 CET 분야의 공동 연구를 거쳐 2025~2026년 6G 표준협력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6G는 단순한 차세대 통신기술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이자 공급망,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6G 표준화 논의에서는 기술적 요구사항뿐 아니라 정책공조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과의 KSP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정책협력과 국제표준화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현재 3GPP, ITU-R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6G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글로벌 표준 구조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5G 상용화와 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기초연구, 표준 거버넌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상호보완적 기반을 바탕으로 두고 기술·정책·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KSP를 추진하게 됐다.

2025~2026년 영국과의 KSP는 한·영 간 6G 표준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협력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첫째, 양국의 5G~6G 정책 및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했다. 한국은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기반으로 AI 중심 네트워크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현대 산업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과 ‘ACT 실행계획(ACT Action Plan)’ 정책을 통해 보안, 복원력, 상호운용성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연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6G를 AI와 위성통신(NTN; Non-Terrestrial Networks) 등을 포함하는 연결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며, 개방형 표준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비지상망(NTN)-지상망(TN) 연결, 에너지 효율, 상호운용 표준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도출하고 정책과 표준 부문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 1월 27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허브인 체다(CHEDDAR)에서 영국 측 연구진이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보틱스를 시연하고 있다. © 펠리 제궁





둘째, 양국은 NTN-TN 통합과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중심으로 6G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 연구진은 NTN-TN 통합 아키텍처, 전송 효율 및 간섭 관리, 다양한 유스케이스(Use Case) 반영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검토했다. 아울러 AI·머신러닝 기반 무선망 자원 효율화, 에너지 절감, AI 기반 무선 접속망 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학습·추론 최적화 등과 관련된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셋째, 양국 KSP 연구진은 단기 및 중장기 표준협력 로드맵과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 단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수행되는 3GPP 연구 단계에서 양국 통신사업자 간 표준화 이슈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6G 서비스 수요 및 수익화 모델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2025~2026년 한·영 KSP는 정부·기관·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양국의 6G 정책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실제 국제표준화 활동 플레이어인 이동통신사업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산업-표준화'를 연계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국 측에서는 KDI가 사업 총괄과 협력 구조 설계를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G 정책 및 표준화 협력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KSP에 참여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했다. 영국 측은 과학혁신기술부(DSIT)를 중심으로 정책 및 표준화 논의를 추진했으며, 브리티시 텔레콤과 보다폰 그룹 등 주요 사업자가 협력 논의와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했다.

양국의 정부·기관·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KSP 연구진은 사업기간 중 개최된 3GPP 회의에 두 차례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자 간 협력 세션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논의되는 주요 기술 현안과 양국 공동 관심 분야를 연계했으며, AI·머신러닝 기반 무선망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양국 사업자 공동 기고서를 3GPP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표준협력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KSP 논의의 결과가 실제 국제표준화 논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지속 가능한 표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TTA 주도로 양국 3GPP 사전 협력 회의를 정례화하고 통신장비 제조사와 산업계의 참여 확대 방향을 검토했다. 장기적으로

는 6G 표준화 단계별 대응 전략과 B2B·B2G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및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6G 비전 페스트(Vision Fest) 등 기존 정책협력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후속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력 방식 전환하고 지속 가능성 높인 한·영 KSP, 정책 자문 넘어 공동연구-정책협력-산업협력 실현

이번 한·영 KSP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KSP의 역할과 방식을 확장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협력 방식의 전환이다.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구조를 넘어 AI, 6G 등 미래지향적 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정책협력, 국제표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방식이 시도됐다. 특히 KSP 논의의 결과가 실제 3GPP 공동 기고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협력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둘째, 협력 주체의 확장이다. 정부와 기관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KSP가 단순 정책자문을 넘어 공동연구-정책협력-산업협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다. 단년도 공동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 표준협력 회의 체계와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등 기존 정책협력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국제개발협력은 전통적인 원조에 더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협력 의제와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디지털 전환, 공급망 등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고 관련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정책공조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영국 KSP는 이렇듯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협력과 국제표준화 논의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KSP의 역할을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KSP가 향후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식협력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송지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jesong@kdi.re.kr

우리가 마신 것은 생수였을까, 플라스틱이었을까

요즘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생수가 구정물이라는 데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 한 원로 과학자가 개인 동영상 상에서 작심하고 한 말이 화제가 된 까닭이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답한다. 갈수록 그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생수산업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잠시 멈춰야 할 때가 됐다.

흔히 ‘살아 있는 물’이라는 뜻의 ‘생수’로 불리지만 사실 공식 명칭은 1995년 제정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이다. 지하수, 용천수처럼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게 물리적으로 처리한 물을 뜻한다. 여기서 ‘물리적 처리’는 여과, 침전, 가열, 자외선 살균, 오존 처리 등을 가리킨다.

여과? 가열? 자외선 살균? 오존 처리? 아주 커다란 약수터에 있는 물을 먹기 좋게 플라스틱병에 담아 유통하는 줄 알았던 소비자라면 이런 단어에 깜짝 놀랐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처리는 당연한 일이다. 살균 처리를 하지 않아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라도 증식하면 어떡하겠나. 만에 하나 불순물이 들어 있어도 문제니 이런 처리는 필수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의 물로도 모자라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처리까지 한 생수를 저 과학자는 왜 ‘구정물’이라고 했던 것일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여러 연구 결과 생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머리 카락 두께의 수백분의 1 수준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빼곡히 들어찬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플라스틱 조각 24만 개

어느새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미세 먼지’나 ‘환경 호르몬’처럼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흔히 5밀리미터(mm) 이하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하는 용어다. 왜 하필 5밀리미터일까? 이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서다.

5밀리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하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은 그 범위가 아주 넓다. 생수 안에 손톱 끄트머리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동등 떠다닌다면 곧바로 알아챌 것이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렇게 1마이크로미터(μm)보다 작은 나노미터(nm) 수준의 플라스틱을 아예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수 속 플라스틱 조각이 바로 이 나노 플라스틱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 있기에 ‘구정물’이라고 한 걸까. 2024년 1월 미국 컬럼비아대의 베이잔 안과 웨이 민 팀이 결정타가 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혁신적인 측정법으로 100나노미터 수준의 플라스틱 조각을 셀 수 있었다.

놀라지 말라. 미국에서 시판 중인 세 개 브랜드의 생수를 분석했더니 생수 1리터당 평균 약 24만 개(최소 11만 개에서 최대 37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 대략 추정치만 제시하던 과거 연구 결과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은 숫자였다. 지금까지 검출하지 못했던



나노 플라스틱이 생수에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아찔한 일은 이렇게 검출한 플라스틱 입자 수십만 개의 90퍼센트 이상이 100~200나노미터 수준의 나노 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이다. 200나노미터는 사람 머리 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 크기다. 이런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속의 혈액, 장기, 심지어 뇌까지도 파고들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다.

생수에서 검출한 나노 플라스틱의 종류도 충격적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폴리아미드였다. 앞서 생수를 병에 담기 전에 여과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터 성분이 폴리아미드다. 물을 깨끗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한 여과 장치에서 역설적으로 나노 플라스틱이 나온 셈이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나노 플라스틱은 페트였다. 어떤 상황인지 알 만하다. 생수병의 주된 성분인 페트 플라스틱이 유통 과정에서 조금씩 용출돼 나노 플라스틱 조각으로 물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마다 폴리아미드, 페트 같은 나노 플라스틱 조각도 몸속으로 같이 들어간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대안은 수돗물

그렇게 몸에 들어간 나노 플라스틱은 얼마나 위험할까? 안타깝게도 모른다. 우리가 섭취한 상당수의 미세 플라스틱은 배설물에 섞여 밖으로 나온다.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 몸속 조직 곳곳으로 파고든 나노 플라스틱이 장기적으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다. 몸에 나뉠 거라는 사실을 짐작만 할 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말마다 마트에서 생수를 사서 먹는 독자라면 여기까지 읽고서 화가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생수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있다. 바로 수돗물이다. 국내외 여러 비교 연구가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수돗물이 생수보다 나노 플라스틱을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확실히 적다.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미세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춰도 수돗물이 생수의 11분의 1 수준이다.

더구나 다른 기준으로 따져봐도 수돗물이 생수보다 훨씬 안전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166개보다 훨씬 많은 362개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 잔류 의약품질처럼 듣기만 해도 찝찝한 항목까지 포함된다. 생수(먹는샘물) 기준 검사 항목이 약 50개인 것과 비교하면 일곱 배나 많다.

흔히 수돗물을 거부해하는 이유인 염소 냄새도 뜻밖에 안전하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미량의 염소가 포함됐기에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세균 증식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가끔 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는 것도 염소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세계 수돗물에 들어가는 미량의 염소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거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서 20~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제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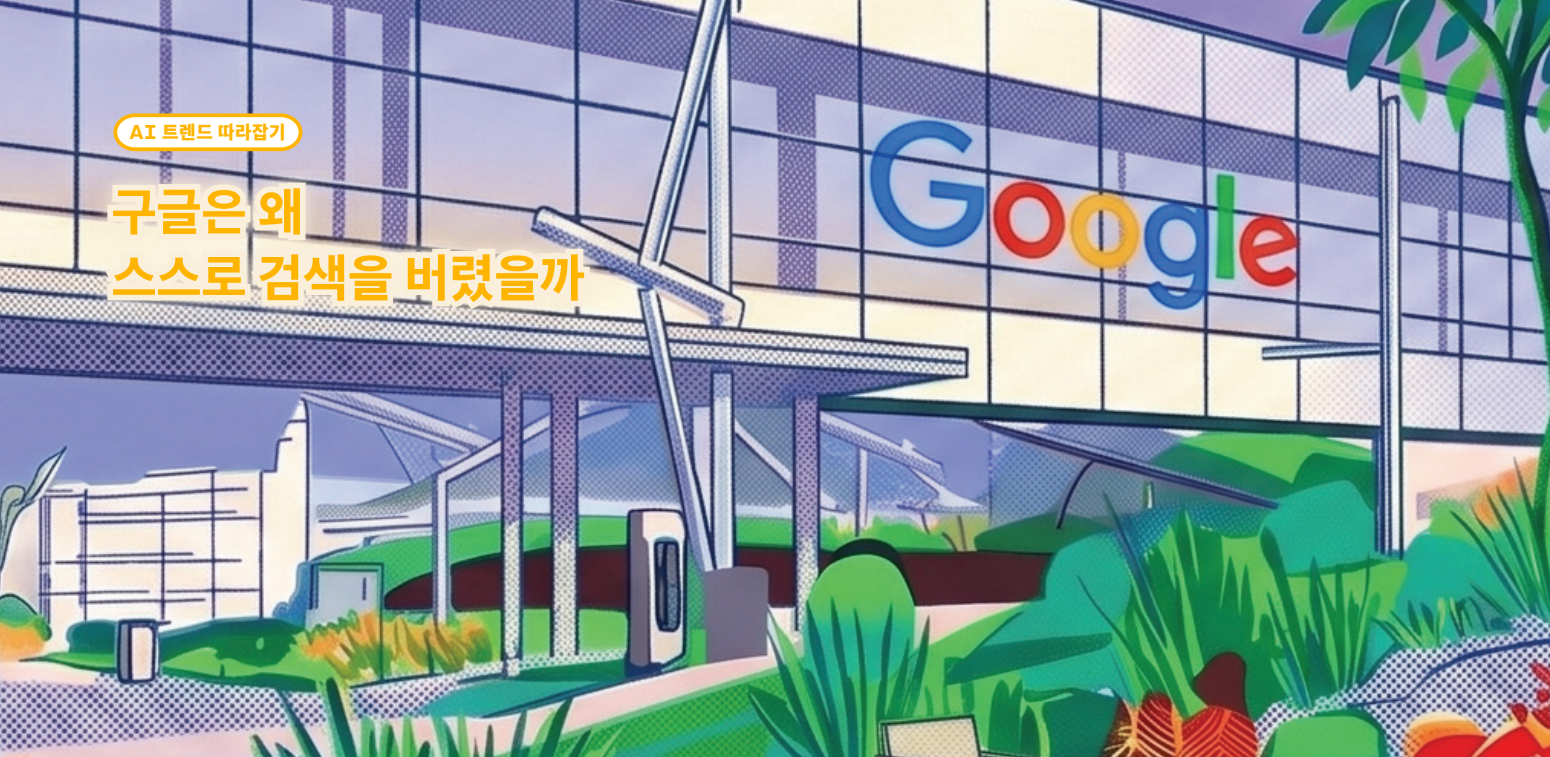
물론 노후 아파트나 주택의 배관, 수돗물을 저장해두는 물탱크에서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채취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99퍼센트 이상의 수돗물이 안전했다. 사실 물탱크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수돗물 안전은 생수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보다 수돗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수록 공공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 수돗물은 더욱 안전해진다. 게다가 생수 소비를 줄이는 일은 탄소 배출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처리 비용도 아낀다. 최종적으로, 생수를 구매할 여유가 없는 이웃을 포함해 우리는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물을 공공재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 아닌가! 🍻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구글은 왜 스스로 검색을 버렸을까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수천 명의 개발자가 모인 구글 본사 캠퍼스 입구에는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모형이 서 있다. 이름은 스탠(Stan). 가장 완전한 티라노사우루스 표본 중 하나를 그대로 본떠 만든 레플리카다. 구글이 굳이 이 거대한 포식자를 회사 입구에 세워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원래 이 건물을 사용하던 옛 주인인 실리콘 그래픽스가 영화 <주라기 공원>의 특수효과를 맡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훨씬 상징적이다. 환경이 바뀌면 천하를 호령하던 포식자도 멸종한다는 경고. 그리고 이번 '구글 I/O 2026'은 매일같이 마주한 그 경고 앞에서 구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검색의 양이 '검색'을 부수다

구글 I/O는 구글이 해마다 개최하는 개발자 콘퍼런스다. 올해는 5월 19일에 개막해 차세대 AI 기술과 플랫폼 비전을 공개했다. "Google Search is AI Search." 이번 행사에서 구글이 던진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다. 25년간 검색의 동의어였던 구글이 스스로를 'AI 검색 엔진'으로 다시 정의한 것이다.

구글 AI 모드의 월간 이용자는 출시 1년 만에 10억 명이 넘었고, AI 개요(AI Overviews) 이용자 수는 25억 명에 달한다. 더 흥미로운 건 검색창의 변화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 줄짜리 검색창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만큼 세로로 늘어나면서 마치 대화창처럼 바뀐다. 키워드 몇 개를 던지는 '검색(Search)'에서, 문장으로 묻고 답을 받는 '질문(Ask)'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이다. 결과 화면도 더는 링크의 나열이 아니다. 행성의 궤도가 궁금하다고 물으면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보여 주고, 자전거 타는 법 영상을 찾으면 40분짜리 유튜브에

서 정확히 4분 53초부터 5분까지 구간을 짚어준다. 구글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검색이라는 그릇을 깨버렸다.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주인공은 제미니AI 옴니(Gemini Omni)다. 영상을 생성하는 AI라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옴니는 월드 모델(World Model), 즉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AI다. 공이 중력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 물체가 충돌할 때 튕겨나가는 방향까지 직접 계산해 영상으로 그려낸다. 겉으로는 영상 제작 도구처럼 보이지만 그 함의는 훨씬 크다.

피지컬 AI를 떠올려보자. 로봇이 현실 세계를 학습하려면 막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학습용 영상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촬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물리 법칙을 이해한 옴니가 영상을 무한히 만들어낸다면, 피지컬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화면 속 영상이 현실 속 로봇의 두뇌로 이어지는, 거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는 셈이다. 구글이 '영상 생성 모델'이라는 협소한 영역을 넘어 AI를 통해 세상 자체를 이해하는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신호다.

구글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발표할 수 있었나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구글이 유일하다. 핵심은 풀스택(Full-stack)에 있다. AI용 칩(TPU)부터 AI 모델(제미니AI), 클라우드, 서비스, 디바이스까지 모두 자체 보유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8세대 TPU는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뉜 듀얼 칩으로, 와트당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2배 향상됐다. 그 결과 새 모델인 제미니AI 3.5 플래시는 다른 프런티어 모델보다 4배 빠른 출력 속도를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하다.



구글이 한 달에 처리하는 토큰 수는 지난해 약 480조 개에서 올해 3,200조 개로 7배 폭증했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기 위해 올 한 해에만 2022년(310억 달러)의 약 6배 규모인 약 1,9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 중 상당수가 AI 인프라와 칩에 배정될 예정이다. 챗GPT의 등장 이후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들었던 구글이,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가장 빠른 제품 출시로 응답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번 키노트의 마무리는 순다 피차이 CEO가 아닌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장식했다. 과학자의 발언으로 끝나는 키노트, 그 자체가 구글의 정체성 변화를 상징한다.

검색창과 영상에 이어 구글이 놓치지 않은 영역은 몸에 부착되는 시다. 이번에 공개된 ‘인텔리전트 아이웨이’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하드웨어를, 한국의 젠틀몬스터와 미국의 와비파커가 디자인을 담당한 스마트 안경이다. 오디오만 지원하는 모델은 올가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은 그 이후 출시된다. 2012년 첫 ‘구글 글래스’의 실패를 두고 구글 측은 “기술보다 패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명품 안경 브랜드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메타와의 전략 차이다. 메타가 안경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립형’을 지향한다면, 구글은 안경을 어디까지나 ‘스마트폰 생태계의 확장 디바이스’로 본다. 안경에 대고 “가는 길에 중국요리 주문해 줘”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의 에이전트가 실제 작업을 처리하고, 결제 단계에서만 사용자 확인을 받는 식이다. 안드로이드라는 거대한 OS 생태계를 가진 구글다운 접근이다.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도 I/O 행사 곳곳에서 드러났다. 라이브 데모에서는 한국어-영어 실시간 통역을 시연했고, AI 생성 콘텐츠 식별 기술인 ‘신스ID’의 새로운 파트너로 카카오가 합류했다.

거인의 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본사 로비의 공룡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환경이 바뀌면 거인도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매일 보면서도, 구글은 오히려 더 큰 거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검색, 영상, 디바이스, 그리고 표준까지 모든 층위에서 자신이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폴스택 아래에서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은 어떤 자리를 찾아야 할까.

실마리를 찾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 빅테크가 표준을 만들수록, 그 위에서 더 좁고 더 날카로운 영역을 차지하는 회사가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시서비스 중 수익을 내는 곳들은 범용 모델 경쟁에 뛰어들어 곳이 아니라, 10대 청소년 심리상담이나 반려동물 전용 유전자 검사 키트처럼 좁은 영역을 정밀하게 파고든 곳들이다.

AI 시대의 진짜 도전은 ‘구글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글이 만든 새 인프라 위에서 구글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빅테크가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글로벌 니치마켓을 노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본사 로비의 공룡은 구글에만이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회사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AI 2026 트렌드 & 활용백과』 저자
kimdukjin@itcl.kr



길티 플레저, 그 역설적 쾌감

우리 동네엔 여러 학교가 몰려 있다. 지하철 역사 안 편의점은 학생들로 늘 북적인다. 그 편의점의 구색이 좀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다. 뭐랄까, 학교 매점 같다. 즉석라면과 과자가 유독 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매장 손님의 기호를 반영해 판매대를 구성하지 싶다. 한번은 소년들이 김치도 없이 즉석라면을 먹는 게 안쓰러워 김치 한 봉지를 사다 줬다. 이 얘기를 집에 했다가 혼이 났다. “애들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아이들 입맛을 존중해라, 불쑥 음식을 내미는 방식은 불편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맞는 말이다.

흔히 편의점, 삼각김밥, 즉석라면이 상징하는 건 ‘빈곤’이다. 정식으로 밥 한 끼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의 식사라는 걸로 정리되곤 한다. 절만만 맛다. 우선 이런 음식의 함의는 속도다.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사람의 메뉴라는 의미다. 거기에 그 음식 자체의 맛이다. 맛은 음식을 먹는 상황과 조건도 포함한다. 말하자면 군대 라면 같은 것으로, 맛이란 매우 심리적인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다른 해석은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이른바 ‘B급 구르메 (gourmet·미식)’다. 고급이 아닌 대중음식에도 맛의 미학이 있다는 뜻이다. 라면, 야키소바, 규동, 편의점 음식 등을 즐기는 문화인데, 핵심은 ‘싸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맛이 좋다’는 취향의 적극적 긍정에 있다. 싸구려를 싸구려로 즐기는 태도, 거기서 오는 일종의 해방감이랄까.

일본 편의점 문화가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된 것은 이 맥락에서다(한국 편의점도 일본에서 왔다). 한국 청년들의 편의점 문화에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어쩔 수 없음’과 ‘이게 좋음’. 빈곤의 흔적과 취향의 선연. 유튜브를 보면 안다. 편의점 만찬이라던가 즉석라면의 다채로운 조합과 배달 음식에 대한 브이로그가 널려 있다. 단순 식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장르로 소비된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는다. 보는 사람은 대리만족을 얻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정체성을 표현한다. 학자들은 이것을 편의성 소비문화 혹은 초가공식품 문화의

한 형태로 분석하지만 현장의 감각은 좀 더 복잡하다. 이런 개념과 함께 영미권에서 쓰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라는 말도 들어왔다. 건강에 좋지 않고 수준도 높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다는 역설적 쾌감을 뜻한다. 편의점 식문화에는 이 감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음식문화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 사회의 분석적 시선에 의해 또렷해졌을 뿐이다. 나 역시 이런 음식을 즐기고, 먹어가며 살아왔다. 단무지 접시를 따로 주는 것조차 호사이던, 두어 쪽의 단무지를 국수 그릇에 함께 던져주던 학교 매점 우동은 왜 그리 맛있던지. 친구랑 둘이서 라면을 여섯 개 끓여 먹는거나 설탕을 뿌려 식빵을 구워 먹던 기억 역시 거창하게 말하면 길티 플레저 아니었을까. 거기에도 떡볶이와 만두,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으로 내 몸을 살찌우고 뼈를 키웠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한국에서 고급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받는 오해가 있다. 식사도 고급으로 즐기지 않을까 하는. 스테이크를 썰고 버터와 랍스터를 넣은 파스타를 먹지 않을까 하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제육 백반이고 김치를 곁들인 라면이며 국밥이다. 서양 셰프들로 치자면 샌드위치와 빅맥과 타코인 셈이다.

우리는 누가 봐도 우수한 식단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이 힘들게 기르고 집에서 만든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다. 길티 플레저란 이런 음식을 먹을 권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이 용어 자체가 일종의 일탈이다. 건강한 음식 사이, 쉬어가듯 일탈의 재미도 필요하지 않을까.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몇 년 배웠다. 지금은 칼럼을 쓰고, 밥을 먹으러 전국을 다닌다.

chanilpark@naver.com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전 국민의 키워드

마주해요

Engage with me

Listen to your heart



마주해요,
나의 마음



주목해요,
너의 마음



해소해요,
우리 함께



요청해요,
도움을

De-stress, together

Ask for help

정신건강
행동실천 수칙

-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한 마음 나누기
- 자연과 호흡하는 시간 갖기
- 하루 5분! 내 몸의 움직임 느껴보기
- 톡톡이 몸과 마음의 작은 휴식 갖기
- 정신건강 상담 **1577-0199** 전화하기

정신건강은 **마주해요**로 시작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등을 따라 여행하는 일



송강호,
『강정평화서신』

『강정평화서신』의 표지에 쓰인 ‘평화는 가둘 수 없다’는 부제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수감된 송강호 활동가와 징집을 거부해 감옥에 갇힌 박정경수가 주고받은 편지를 한데 묶은 책. 한 사람은 평화를 외치다가, 한 사람은 총 들기를 거부하다 수감됐으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나는 이 책의 공저자 송강호 활동가를 잘 안다. 오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존경한다.

처음 만난 것은 십수 년 전이다. 송강호 선생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작은 바닷마을에서 토착민족인 만다르족과 함께 ‘산덕’이라는 전통 요트를 띄우고 있었다. 해마다 평화 활동가 몇명과 해상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십년을 이어온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얼떨결에 벌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작은 고깃배로 항해훈련을 하는 송강호 선생과 활동가들.

진 일이었다. 나는 딱히 평화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새로운 여행이 고깃배 이국적인 요트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한 달을 함께 지내보니 송강호 선생은 환갑을 목전에 둔 나이가 무색하게 여느 젊은이보다 성실했다. 그러니 일행 중에서 가장 몸이 단단했고, 가장 검게 그을려 있었다. 작은 고깃잡이배 산책을 부리는 일은 거친 바다와 별이는 육탄전이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출렁일 때마다 나는 가슴을 졸였지만, 선생은 그저 묵묵히 키를 잡고 바다의 리듬을 읽어낼 뿐이었다.

활동가들은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야자 껍질로 불을 지펴 밥을 지으며 현지의 낙후된 생활방식을 군소리 없이 따라다녔다. 그러니 누가 활동가이고 누가 어

부인지 가려지지 않았다. 또 어찌나 검소한지 콜라 한 병조차 허투루 사먹지 않았다. 고백하자면, 나는 밤마다 거처를 빠져나와 몰래 콜라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낮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평화를 배우는 얼굴을 하고, 밤에는 시원하지도 않은 콜라를 좋다고 훌쩍이던 걸 떠올리면 지금도 낮 뜨겁다. 부끄러움과 콜라 한 잔의 쾌락을 기꺼이 맞바꿀 정도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으니, 그들의 우직하고 검소한 생활은 내가 흉내 내기엔 너무나 버거웠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닳는다고 했던가, 한 달을 함께 지내다 보니 내 안의 한구석 어딘가에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분쟁과 재난 곳곳을 떠돈 활동가 송강호를 알려주는 책... 선생을 따라 평화를 여행하는 일에 이끌리다

술라웨시 여행 이후로 자연스럽게 선생을 따라다녔다. 『강정 평화서신』을 읽으면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온전히 알게 됐다. 책을 펼치면 편지글 사이로 송강호의 평생이 잘 드러난다. 30여 년 전 동티모르의 한 불탄 마을에서 시작된 그의 활동은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인도네시아 아체로 이어졌다. 분쟁과 재난이 남긴 상처를 따라 세계 곳곳을 떠돈 평화 여행자.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제주 강정마을이었다. ‘세계 평화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간 것이었다. 평화를 찾아 세계를 누빈 사람이 한자리에 눌러앉았고, 그 자리는 두 번의 옥고를 치러가며 가장 오래 싸우게 된 자리가 됐다.

“나는 감옥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방이 되면 돛배를 구해서 오키나와와 하와이로 항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기지로 땅과 바다를 잃어버린 희생자들을 만나 평화를 위한 결속과 연대를 더욱 굳게 만들어 동병상련으로 맺어진 국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섬 주민이야말로 국가주의의 광기에 가장 쉽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중략)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이런 위기에 처한 섬들을 향해 뜻을 올리고 싶습니다.”

선생을 따라 평화를 여행하는 일에 이끌렸다. 거창한 결심이 있던 것은 아니다. 그저 그가 가는 곳을 따라가서 조금씩 일을 돕고 싶을 뿐이었다. 평생 해온 것이 여행이니, 이왕 하는 여행이 평화에 티끌만 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선생에게는 평생을 버려온 여행이 하나 있었다. 작은 요트로 평화의 바다를 항해하는 일. 세계의 섬과 섬을 잇는 항해를 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그의 숙원이었다. 그 원대한 항해의 첫 단추가 동중국해의 제주와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것이었다. 동중국해는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유로 항상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곳이다. 그러니 세 섬 모두에 군사기지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생이 감옥에서부터 꾸어온 꿈,
넓은 배를 고쳐 군사의 바다를 평화로 잇는 것**

송강호 선생은 그 다툼의 바다를 '공평해'라 고쳐 부르자고 제안한다. 함께 공(共), 평화 평(平), 바다 해(海). 모든 생명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바다. 작은 배 한 척으로 거대한 군사의 바다를 향해하겠다는 소리가 다소 무모하게 들렸다. 심지어 항해에 쓸 요트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반신반의한 가운데, 일본에 가서 버리기 직전의 낡은 요트 한 척을 사 오는 것으로 공평해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하지만 길고 먼 항해를 단박에 떠날 순 없는 일이었고,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 더욱 어려웠다.

일본에서 가져온 배는 말 그대로 고철이나 다름없었다. 선체 곳곳에 보수가 필요해 돈이 생기면 수리를 조금 하고, 돈이 떨어지면 몸으로 때우는 날들이 수년간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낡은 요트로 어떻게 먼바다를 향해하겠느냐며 무모한 짓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선생은 묵묵히 못을 박고 칠을 했다. 마침내 모든 수리

를 마치고 출항을 앞두었을 때, 요트의 조종간을 잡은 선생의 다부진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맨몸을 내던지는 일, 그 무모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나는 공평해 프로젝트의 언저리를 오래 맴돌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선생을 도왔지만 먹고사는 일까지 제쳐둘 수 없어 정작 중요한 항해를 함께하진 못했다. 물에 남아 그들이 무사히 닿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 일이었다. 송강호 선생과 선원들은 떠난 지 100일이 넘어 5천km를 항해하고 돌아왔다. 감옥에서 그가 꾸어던, 돛배를 구해 섬과 섬을 잇겠다던 그 꿈이 비로소 실현된 것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의 항해를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다. 무모한 여행을 기어이 성사시키는 그 우직함에 대해.

언젠가 제주 법정의 방청석에 앉게 됐다. 선생이 두 번째로 수감돼 재판을 받을 때였다. 따로 면회는 가지 않았다. 일부러 그랬다.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른인데,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도 조금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지켜보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자리가 선생 곁에 더 오래 머무는 방법인지도 모르니까. 법정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변명도 호소도 없었다. 말을 마치고 다시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등을 보았다. 솔라



나는 공평해 항해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요트에 작은 카메라를 매달아 6시간마다 한 장의 사진을 찍게 세팅해 두었다. 마음으로 함께한 항해다.

동료 활동가와 시민들의 조출항 환송 속에서 공평해 프로젝트를 위해 출항하던 날.






어느 추운 겨울날 바다의 매서운 바람에 맞서 풍광 세매고 항해훈련 중인 송강호 선생.

웨시에서 본 그 단단하던 어깨가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다. 평화는 사람을 꺾는 일인지도 모른다. 세상을 지키려는 사람이 정작 제 몸을 지키지 못했다.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싶을 때 선생의 좁아진 어깨를 떠올리다

책을 덮는다. ‘평화는 가둘 수 없다’는 부제를 다시 들여다본다. 법정에서 선생의 좁아진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처럼. 송강호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그가 세상에 뿌려놓은 평화의 씨앗까지 가뒀을 순 없었다. 콜라나 몰래 사 먹던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뿌리를 내렸으니 말이다. 선생이 평화를 여행하는 곳을 좇졸 따라다니던 나는 이제 혼자서 로hing야 난민 캠프를 찾기도 하고, 내전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시리아에 다녀오기도 한다. 폭격으로 무너진 젓빛 건물의 잔해를 걸을 때, 그리고 희망 없는 눈빛들이 모여 있는 난민촌의 진흙길을 걸을 때, 내 안에서는 질문이 솟구친다.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고작 사진 몇 장 찍어

서, 혹은 망망대해에 작은 요트 한 척 띄워서 무엇을 바꿀 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어이 아이를 안고 웃어 보이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법정에 홀로 앉아 있던 선생의 좁아진 어깨를 떠올린다. 어쩌면 선생이 평생 외친 “평화는 가둘 수 없다”는 문장도 이런 풍경 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등을 따라 여행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새 여행지를 두리번거린다. 지도를 펼쳐 놓고 아직 가보지 못한 분쟁의 자리와, 환대가 남아 있을 어느 골목 위로 손가락을 더듬더듬 옮긴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혼자서 그 길을 묻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선생이 빙긋 웃고 있을 것만 같다. 



박 로드리고 사회 촬영감독
영화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
맹렬하게 여행하고 틈틈이 글을 쓴다.
filmrodrigo@naver.com

‘3고’ 시대 금융의 본령을 다시 묻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을 넘어선 이후 좀처럼 1,50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는 다시 한번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준금리는 2.50%에서 8회 연속 동결됐으나 최근 시장이 인상 가능성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국고채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국면에서 금융정책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금리를 낮추면 물가와 환율이 부담스럽고, 긴축을 유지하면 시중금리 상승이 곧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전이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개인은 투자도 소비도 이자비용부터 따져야 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정책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 3고 시대를 건디는 새로운 작동방식이라고 보는 이유다.

‘돈을 더 푸는 정책’으로 두 정책을 받아들이면 본질을 놓친다. 필요한 건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 자금의 방향 전환이다. 부동산과 단기 안전자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시·반도체·바이오·에너지·방산, 그리고 지역산업과 혁신 중소기업으로 옮겨가도록 금융의 위험평가 및 보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은 산업정책의 금융 버전이 아니라 공급능력을 확충해 중장기 물가 압력과 대외 취약성을 함께 낮추는 구조개혁형 금융정책이다.

두 정책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생산적 금융은 ‘선별과 집중’을, 포용금융은 ‘확산과 안전망’을 따른다는 점에서 자원을 놓고 경합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둘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 관계다. 생산적 금융이 미래산업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이라면 포용금융은 그 길에 진입조차 못 한 이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다. 성장의 상단을 키우는 정책과 경제의 하단을 지탱하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가 완성된다. 혁신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 창업자처럼 두 정책의 경계에 선 경제주체가 적지 않다는 점도 그 보완성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자금배분 개입이 관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는 가볍지 않다.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생산적 금융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투자의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자본의 유인을 만들며 독립적 심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마중물은 관치가 아니라 시장보완이다. 정책자금은 과거의 담보가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과 기술경쟁력을 평가해야 하고, 지원 대상은 ‘보호할 기업’이 아니라 ‘성장할 기업’이어야 한다. 엄격한 선별과 책임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

포용금융 역시 단순 이자감면이나 채무탕감이 아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사금융-연체-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다중채무 비중 상승을 거듭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실 상환자와 일시적 유동성 위기자를 구분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소득창출·금융교육을 결합하면 포용금융은 복지를 넘어 생산성 정책으로 진화한다. 오늘의 취약계층이 내일의 혁신 창업자가 될 수 있다면, 포용은 그 자체로 미래 성장의 묘판(苗板)이 된다.

정책의 성패는 설계가 결정한다. 첫째, 성과지표를 ‘규모’에서 ‘질’로 옮겨야 한다. ‘5년간 얼마’라는 자금공급 총량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생산성·고용·수출이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 둘째, 결정적으로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대안신용평가, 기업 단위 자금흐름 추적, 한계기업 조기 식별 모형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신경계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당국이 한목소리로 톤을 조율할 때 금융권은 비로소 5년, 10년의 인내자본을 약속할 수 있다.

3고 시대에 필요한 금융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긴 안목의 돈이고, 더 값싼 돈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돈이다.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약속에서 첨단·혁신이라는 미래의 약속으로 자금의 물길을 돌리는 일은 한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한 세대의 과제다. 비판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설계를 가다듬을 때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은 3고 시대를 건너는 대한민국 경제의 두 날개가 될 수 있다.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한국경제연구학회장

낱말퍼즐

시사·경제 용어를 낱말 풀이 형식으로 익혀 보세요.

이달의 『나라경제』를 열심히 읽은 독자라면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을 문제들입니다.

①			② 프					③
④						⑤ 민		
수								점
산			⑥ 초		⑦	익		
부					동			
		⑧	⑨					
								⑩ 파
⑪ H				⑫ I				
⑬					S		⑭	

가로퍼즐



- ②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직업. 최근 앤스로픽 보고서에서 AI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지목됐다.
- ④ 소득과 자산, 지역과 계층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사회 현상.
- ⑤ 국민이 주권을 갖고 선거나 참여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
- ⑥ 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벌어들인 이익.
최근 반도체 호황과 삼성전자 성과급 논의에서 화제가 됐다.
- ⑧ 미세 플라스틱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혈액과 장기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 ○○플라스틱
- 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
투자 수익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가 도입됐다.
- ⑬ AI 시대 미국 중시를 이끄는 6개 초거대 기술 기업(메타·앤스로픽·엔비디아·구글·오픈AI·스페이스X)을 묶어 부르는 신조어.
- ⑭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반도체.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세로퍼즐

- ① 우리나라의 바다와 항만, 수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난해 12월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 ③ 24시간 운영하는 소매점으로, 내수 소비와 1인 가구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 유통 채널이다.
- ⑦ 부모 세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이 계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가능성. 사회 ○○○
- ⑨ 임금 협상과 단체교섭의 주체인 노동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말.
- ⑩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가 대표적이다.
- ⑫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 기술.
High Bandwidth Memory의 줄임말.
- ⑭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시에 데뷔하는 기업공개에 뜻하는 용어.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다.

· 7월 22일까지 kdi_nara@naver.com 혹은 『나라경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해 커피쿠폰(1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7월 29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The time to repair
the roof is
when the sun is shining.”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John F. Kennedy
존 F. 케네디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호황 속 전략적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